



2024 국제기구 인재양성 캠프 결과보고서

2024. 9. 5 (목) ~ 10. 17 (목)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2024 국제기구 인재양성 캠프 결과보고서

International Youth
Day Celebration
August 2023



CELEBRATING WAYS #YouthLead AS AGENTS OF CHANGE FOR THE GLOBAL GOALS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UN Secretary-General's Message on International Youth Day

Every year, International Youth Day celebrates the determination, ideas and leadership of young people as we pursue a better world.

Across all of today's challenges, young people are calling for bold and accelerated action, standing in solidarity with the most vulnerable, and designing solutions to ensure social, economic and climate justice, and peace and prosperity for all.

To expand their participation, I recently launched a policy brief calling for governments to make youth participation the norm, rather than the exception, across decisions and policies around the world.

This year's theme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ensuring young people gain and apply skills in the burgeoning green economy. From innovative sustainable technologies and renewable energy, to revolutions in transportation systems and industrial activity, young people must be equipped with skills and knowledge to shape a cleaner, greener, more climate resilient future.

Humanity depends on the boundless energy, ideas and contributions of youth everywhere. Today and every day, let's support and stand with young people in shaping a just and sustainable world, for people and planet.

- António Guterres, 12 Aug 2023 -

행사 개요



행 사 명	2024 국제기구 인재양성 캠프
주 제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교 육 기 간	2024. 9. 5. (목) ~ 10. 17. (목)
교 육 장 소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주 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 관	 IEGI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협 력	 미래의망기구 Hope to the Future Association

프로그램

9. 5. (목)

시간	세부 내용
14:30 – 15:00	개회식
15:00 – 15:30	국제기구 전문가 특강 유엔의 역사와 시스템, 총회의 이해 이 영 진 유엔협회세계연맹 교육담당관
15:30 – 16:00	
16:00 – 16:30	
16:30 – 17:00	[모의유엔 세션 1] 위원회별 의제 수립, 입장표명서 작성
17:00 – 17:30	

9. 12. (목)

시간	세부 내용
14:30 – 15:00	전·현직 대사 초청 강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세계시민의식 오 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전 유엔 대사)
15:00 – 15:30	
15:30 – 16:00	
16:00 – 16:30	희망나눔 운동화 그리기 봉사활동 아동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재능 나눔
16:30 – 17:00	
17:00 – 17:30	

9. 19. (목)

시간	세부 내용
14:30 – 15:00	국제기구 전문가 특강 유엔 및 국제기구 회의의 이해와 컨센서스 김 중 현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 대외협력관
15:00 – 15:30	
15:30 – 16:00	
16:00 – 16:30	[모의유엔 세션 2] 위원회별 모의유엔 체험, 결의안 작성
16:30 – 17:00	
17:00 – 17:30	

10. 10. (목)

시간	세부 내용
14:30 – 15:00	[모의유엔 세션 3] 위원회별 결의안 도출과정 발표
15:00 – 15:30	
15:30 – 16:00	국제기구 전문가 특강 유네스코 유산과 국제정치 김 지 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16:00 – 16:30	
16:30 – 17:00	국제기구 전문가 특강 미래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정 우 탁 경희대학교 교수(전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17:00 – 17:30	

10. 17. (목)

시간	세부 내용
14:30 – 15:00	전·현직 대사 초청 강연 국제사회와 세계시민 박 철 주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전 주남아공 대사)
15:00 – 15:30	
15:30 – 16:00	
16:00 – 16:30	희망전등 그린라이트 제작 봉사활동 아프리카 전기 없는 가정 지원을 위한 청소년의 재능 나눔
16:30 – 17:00	
17:00 – 17:30	폐회 및 수료식

참가생 소개

약칭	위원회 이름	참가생 수
UN ESCAP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15 명
UN POG	유엔거버넌스센터	18 명
UN-APCICT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원	15 명
NEASPEC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19 명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	20 명

참가생 소개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강연우	여	Yeon Woo Kang	인천아라중학교
고주은	여	Ju Eun Go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김목현	여	Mokhyun Kim	백석고등학교
김지원	여	Jee Won Kim	계산여자중학교
박강이소	남	Yi So Parkgang	덕신고등학교
박채희	여	Chae Hui Pak	삼산중학교
신효섭	남	Hyo Seop Shin	덕신고등학교
왕리원	여	Ri Won Wang	계산여자중학교
윤지서	남	Ji Seo Yoon	인천청라중학교
이승아	여	Seunga Lee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이시은	여	Sie Un Lee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이예원	여	Yewon Lee	백석고등학교
정채희	여	Chae Hee Jung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지유나	여	Yu Na Ji	계산여자중학교
차시연	여	Siyeon Cha	검단고등학교

유엔거버넌스센터(UN POG)

김고은	여	Go Eun Kim	청호중학교
김승연	여	Seung Yeon Kim	진산중학교
김예준	남	Ye Jun Kim	용현중학교
김찬희	남	Chan Hee Kim	세일고등학교
김하은	여	Ha Eun Kim	옥련여자고등학교
노경서	남	Kyeong Seo Roh	세일고등학교
안현수	여	Hyun Soo An	부원여자중학교
양지수	여	Jisu Yang	인천논현고등학교
오주희	여	Ju Hee Oh	부원여자중학교
이세준	남	Se Joon Lee	세일고등학교
이소율	여	So Yul Lee	진산중학교
이하정	여	Ha Jung Lee	계산여자중학교
정서윤	여	Seoyoon Jung	능허대중학교
정성빈	남	Sung-Pin Jung	인천중산중학교
정제이	여	Jay Jeong	인천신정중학교
조현우	남	Hyun Woo Cho	청호중학교
최승준	남	Seung Joon Choi	인천신정중학교
최하늘	여	Ha Neul Choi	인천산곡고등학교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강민주	여	Min Ju Kang	진산중학교
강부경	여	Bukyeong Kang	청람중학교
국정현	남	Jeonghyeon Kook	능허대중학교
김단비	여	Dan Bi Kim	능허대중학교
김한결	남	Han Kyeol Kim	세일고등학교
남예린	여	Nam Yerin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문정빈	여	Jeong Bin Moon	인천산곡고등학교
송채원	여	Chae Won Song	인천청라중학교
이영림	여	Yeong Lim Lee	능허대중학교
이정원	남	Jeong Won Lee	세일고등학교
장서연	여	Seoyeon Jang	인천현송중학교
최강민	남	Kangmin Choi	대인고등학교
최준	남	Jun Choi	청량중학교
황은샘	여	Eun Saem Hwang	신현여자중학교
황은율	여	Eun Yul Hwang	신현여자중학교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

강재이	여	Jaei Kang	청호중학교
김민경	여	Min Kyung Kim	인천현송중학교
김상민	남	Sangmin Kim	청호중학교
김태호	남	Tae Ho Kim	세일고등학교
남시은	여	Si Eun Nam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박수하	여	Su Ha Park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박정은	여	Jeong Eun Park	인천청라중학교
박해밀	여	Hae Mil Park	옥련여자고등학교
소민섭	남	Min Seop So	세일고등학교
유리한	남	Rihan Yu	청호중학교
이한세	남	Hanse Lee	청호중학교
장유나	여	Yuna Jang	능허대중학교
진세아	여	Seah Jin	능허대중학교
최서연	여	Seoyeon Choi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최은	여	Eun Choi	인천현송중학교
최찬진	남	Chan Jin Choi	세일고등학교
하이안	여	Ian Ha	청호중학교
한건희	남	Gunhee Han	청호중학교
홍새롬	여	Sae Rom Hong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고윤지	여	Yoon Ji Ko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권세은	여	Se Eun Kwon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김라운	여	Ra On Kim	인천아라중학교
김이안	여	Eon Kim	인천신정중학교
김지우	여	Jiwoo Kim	청호중학교
문영민	남	Young Min Moon	세일고등학교
백채린	여	Chaerin Back	청람중학교
백효원	여	Hyo Won Baek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손태민	남	Tae Min Son	청호중학교
안지원	여	Jiwon Ahn	인천해원중학교
유연서	여	Yeon Seo Yoo	진산중학교
유준	남	Joon Yoo	세일고등학교
유지우	여	Ji Woo Yoo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이시윤	여	Si Yun Lee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정은유	여	Eunyou Jung	청람중학교
정지후	남	Ji Hoo Jung	청호중학교
조윤성	남	Youn Seong Cho	청호중학교
최수아	여	Cuah Choi	청호중학교
최우선	남	Woo-Sun Choi	인천중산중학교
황예진	여	Yejin Hwang	청람중학교

강연자 소개

구분	강연자
전·현직 대사 초청 강연	오준 Ambassador Oh Joon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前 유엔 대사
	박철주 Ambassador Park Chull-joo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 前 주남아공 대사
	정우탁 Dr. Chung Utak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前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김중현 Dr. Kim Junghyun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 대외협력관 前 유엔개발계획 베트남사무소 대외협력관
국제기구 전문가 초청 강연	김지현 Dr. Kim Jih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하버드대학교 아시아센터 방문학자
	이영진 Lee Youngjin 유엔협회세계연맹 교육담당관

전 · 현직 대사 초청 강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세계시민의식



오준 | Ambassador Oh Joon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前 유엔 대사

오준 대사는 현재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며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준 대사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왔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대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그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유엔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오준 대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ECOSOC)의 의장을 역임하며,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준 대사는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도 다양한 강연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아동 및 장애인 인권과 더불어 차세대 리더들에게 국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심어주고 있다.

전 · 현직 대사 초청 강연

국제사회와 세계시민



박철주 | Ambassador Park Chull-joo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

前 주남아공 대사

박철주 대사는 현재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관이다. 그는 전라남도의 국제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 전문가로, 오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철주 대사의 노력은 전라남도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박 대사는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로 활동하기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 남아공) 주재 대사와 유엔 차석대사로도 활동했다.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한국과 남아공 간의 경제, 정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다방면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제기구 전문가 초청 강연

미래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정우탁 | Dr. Chung Utak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前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정우탁 교수는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로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국제기구의 중요성과 역할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강의하고 있다. 정우탁 교수는 경희대학교에서 강의하기 전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UNESCO Asia-Pacific Centre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 및 국제 이해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교육, 국제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20 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해 왔다.

그의 리더십 아래,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은 지역 내에서 평화 교육, 인권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청소년과 교육자들에게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정 교수는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 교육원이 국제적인 교육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국제기구 전문가 초청 강연

유엔 및 국제기구 회의의 이해와 컨센서스



김중현 | Dr. Kim Junghyun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사무소 대외협력관

前 유엔개발계획 베트남사무소 대외협력관

김중현 대외협력관은 경제, 기후, 교육 등 다방면의 국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FAO PLO in ROK)에서 대외협력관으로 재직 중이며, 식량 안보 및 영양, 농식품 시스템 전환, 코로나 19 복구, 스마트/디지털 농업, 수산업, 임업 등 세계 식량 및 농업 개발의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해 인식을 제고하고, 각국 정부, 기업체, 시·도 지자체,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조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정책 기조와 FAO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우수한 경험, 기술, 전문성, 모범 사례 등을 국제 사회 및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중현 대외협력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근무하기 전 유엔개발계획 베트남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베트남 및 아시아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국제기구 전문가 초청 강연

유네스코 유산과 국제정치 -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산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김지현 | Dr. Kim Jiho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하버드대학교 아시아센터 방문학자

김지현 선임 전문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가로, 문화재 연구와 유네스코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문화유산 보존 및 등재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김 전문관은 풀브라이트 포스트닥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하버드대학교에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1972)과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 등 유네스코 유산 보호 제도와 관련된 국내법과 정책을 연구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의 유산 보호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한국의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및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 전문관의 헌신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기구 전문가 초청 강연

유엔의 역사와 시스템, 총회의 이해



이영진 | Lee Youngjin

유엔협회세계연맹 교육담당관

이영진 담당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유엔협회세계연맹과 한국 대학들과의 협업을 통해 매년 한국 대학생들을 뉴욕 유엔 본부에 초대하여 유엔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담당관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유엔의 역사와 설립 배경 등 유엔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강연을 통해 유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국제 협력을 지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여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활동 결과

위원회 이름	아젠다
UN ESCAP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협력 방안
UN POG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
UN-APCICT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NEASPEC	Strategi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A-WEB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fforts in Addressing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 Election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협력 방안

코로나 19 팬데믹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동북아시아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간의 협력은 지역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은 팬데믹 이후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하다.



**왕리원(계산여자중학교), 윤지서(인천청라중학교),
이시은(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이예원(백석고등학교)**

미국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 경로 지속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임금과 급여와 같은 조정 보상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실질적 구매력 증가율이 비교적 낮다. 또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아 실업률이 증가하여 경제 회복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팬데믹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와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중국의 BRI 프로젝트의 영향이 크다. 제 8 회 동북아 CEO 경제협력포럼이 개최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반응과 동북아시아의 상생 경제 모델 개발에 대한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제 13 차 한중일 보건 장관 화상 회의를 개최해 다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시행해 팬데믹 이후 경제를 빠르게 회복했지만 동북아시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의료 물자를 비축 및 비상시 배포하는 전략적 국가 비축(SNS), 재난 대응, 팬데믹을 포함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국가 사건 관리 시스템(NIMS), 질병의 확산을 추적하고 통제하며, 주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대비했다. 두 번째로 CDC는 질병 확산을 줄이기

위한 격리, 마스크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고 연방 기관은 백신 개발을 신속히 진행하고 공평한 배포를 보장했다. 또 연방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경기 부양 지급, 실업 혜택, 기업 대출을 제공한 CARES 법안을 포함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세 번째로 미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시 검역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여행을 제한하고 국무부, 국토안보부(DHS)는 여행 권고 및 제한 발령을 선포했다. 네 번째로 미국은 WHO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데이터, 연구, 모범 사례를 공유했고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GHSA)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할 수 있는 전 세계 역량 강화를 목표로했다. 다섯 번째는 연방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CDC, HHS 등 관련 기관은 질병 발생, 예방 조치,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업데이트하고 주 및 지방 공중 보건 부서는 국가 지침을 시행하고 특정 지역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거나 연방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등의 행정 명령을 통해 비상 요구에 대응했다. 또 팬데믹 동안 의회는 의료 시스템, 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 법안과 긴급 자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소상공인 및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상과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소외된 계층을 최소화하며 지원 절차의 명확한 기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근로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고위험 직군 근로자들에게는 충분한 보호 장비 제공과 안전 지침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코로나 관련 결의안에는 초기 대응이 모범적이었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백신 연구를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지만,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았다. 첫 번째로는 신속한 팬데믹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에 지역별로 다른 대응 방식을 취하는 대신, 연방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방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 세계 및 국내 전염병 발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감염병의 초기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 의료 자원을 분배해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 물자(마스크, 산소호흡기 등)를 비축할 수 있는 중앙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CDC(질병통제예방센터), NIH(국립보건원) 등 정부 기관이 일관성 있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일반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또한, 강조해야 할 점은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의 차단이다. 팬데믹 동안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SNS 플랫폼과 협력하여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유포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또한 이민자와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다국어 정보 제공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동일한 방역 지침과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의료 시스템 강화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팬데믹 대비 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상시에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의료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ICU, 산소 공급 장비 등의 의료 설비를 미리 비축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추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은 재택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여 병원의 부담을 줄인다. 네 번째로 봉쇄조치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된 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지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실직자, 노년층, 저소득층이 팬데믹 중에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실업수당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우선시해야 한다. 또한 팬데믹 중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방역 장비 지원 및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로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백신을 지역, 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백신 유통망을 강화해야 하며 또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인 백신 및 치료제 보급에 기여하며, 글로벌 전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팬데믹 같은 질병에 대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관련 기관과 인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감염병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유나(계산여자중학교), 정채희(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차시연(검단고등학교)**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한국 경제도 이 위기를 피해 갈 수 없었다. 2020 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85% 감소했으나, 국가의 포괄적인 위기관리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어 2021년에는 4% 성장하며 11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은 국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을 약 3% 포인트, 민간 소비 증가율을 7% 포인트 이상 낮췄고, 고용은 약 46 만 명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또한 인류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디지털화와 재택근무, SNS 의존도 증가는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노동과 여가의 균형, 즉 일과 삶의 균형도 팬데믹 이후 큰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타게 되었다. 특히 감염병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면형 서비스업은 전례 없이 침체된 수준을 보여주었고, 현재까지 대면 서비스의 성장률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대면 서비스의 경기 침체를 막고자 비대면 진료 등을 활성화시켜 본래 대면이었던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의 영역으로 조금씩 접목시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글로벌 보건 협력 측면에서 각 국가들의 사회 복지와 국민건강에 관한 대응과 의사를 확인해 보면, 2014 년부터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 참여하며 공중 보건 대응 능력을 강화해 왔고, 2017년에는 WHO의 합동외부평가를 자발적으로 요청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IVI) 설립을 주도하여 글로벌 백신 연구와 보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 체제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였고 관리 체제에 있어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모바일 어플을 통한 접촉자 추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협력의 힘이 아닌 국제 연대와 협력에서도 한국은 코로나 19 백신의 국제적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백신을 공정하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있어서 디지털 경제 발달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주체들의 행태·인식 등이 변화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한국판 뉴딜 정부 종합계획을 앞세워 대응방안을 구축하였다. 한국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의 혁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이 국내 경제회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다자 간 협력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는 다자 간 협력을 위하여 UN, G20, APEC 과 같은 단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프라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회복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은 2050 탄소 중립 선언, 그린 성장 전략 등의 대응 방안을 통하여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었다. 각 국가의 경제 회복 전략, 속도는 다르지만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팬데믹 이후 한국은 지역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국내 항생제 처방량은 2016 년 26.9DDD 를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기간인 2020~2021 년엔 20.0DDD 아래로 내려가는 등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호흡기계 감염이 감소하였으며 항생제 처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2022 년엔 항생제 처방량이 2021 년 16.0 DDD 에서 2022 년 21.3 DDD 로 1 년 새 33% 나 증가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항생제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 세파게·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코로나 초기 크게 늘었다가 엔데믹에 가까워지며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 외래 항생제 처방 중 세파게·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2019 년 39.5%에서 2020 년 43.6%·2021 년 44.8% 등으로 증가하였고 2022 년엔 43.1%로 소폭 감소하였다. 항생제는 내성 문제로 인해 처방과 사용에 있어 관리가 필요하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정책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한국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백신 공동 개발 및 생산, 의료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지역 차원의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한 대응방안 준비에 있다.

2015 년, UN 은 팬데믹, 기후변화의 악영향, 지정한 적 긴장과 분쟁 등으로 경제의 여러 취약점이 드러나고 기존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및 체계화라는 주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사회연대경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두를 위한 생활수준 향상, 재교육과 직무향상교육 분야 등을 포함해 사회적 혁신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UN 이 선택한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사회연대경제 결의를 각 국의 주요 경제 정책 분야에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 은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내놓았지만 재정 지원 부족,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을 높여 각 국가, 국민에게 이목을 끌어야 하며 소외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 대응 방안이나 국가 간 원조,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위 의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을 볼 수 있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는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한 해결 방안은 해상 무역의 중심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 육로 무역의 중심인 동북아시아가 팬데믹 예방, 팬데믹 발생 시 대처 방안, 백신에 대한 자료 공유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네트워크가 개발될 시 단순히 팬데믹 대응만이 아닌 국가 간 연대감을 통해 서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의료 인프라와 자원의 상호 교류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까지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 사회의 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경제 회복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지원(계산여자중학교), 김목현(백석고등학교),

신호섭(덕신고등학교)

팬데믹 이후 무역과 나라 간의 교류가 끊기며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IT(디지털 경제) 산업이 발전하는 등 좋은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내수시장의 둔화 그리고 디플레이션 압력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새로운 내륙 운송 체계를 마련하려는 일대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 몽골 또한 한국 기업의 지원을 받아 IT(디지털 경제) 산업이 발전했다. 그리고 중-미 패권전쟁이 심화되며 한국이 중국과의 교류를 축소시키고 몽골과의 교류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수시장이 죽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광물이나 석탄을 주로 생산해 수출하는 몽골의 전체적 수출량이 감소했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계획에 몽골이 참여하며 몽골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기존에 이루어진 국제적 논의에는 녹색 기술,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몽골-중국-한국 3 국 협력 회의가 있고, 에너지 협력, 환경 지속 가능성,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유라시아 경제 포럼이 있고, 팬데믹 이후 환경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아시아 태평양 환경 협회 (APEA) 회의가 있다. 해당 의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한국 측에서는 재난지원금, 대외 경제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했고, 일본 측에서는 대규모 경제 회복 패키지, 녹색 경제, 환경 보호,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 중국은 소비 진작, 내수 강화, 경제 자극 패키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했고 미국은 대규모 재정 자극 패키지, 재정 지원, 세금 혜택, 고용 회복, 노동 시장 지원 정책을, 몽골은 경제 재건 계획, 재정 지원 및 자금 조달, 녹색 경제 전환, 국제 협력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팬데믹 중 경기 회복 강화 주제로 대통령 주도의 간담회가 정부 청사에서 열렸었다. 이 자리에서 L.Oyun-Erdene 총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할 정책”을 소개했다. 몽골은 신흥 경제의 개혁을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2020 년, 5.3% 수축에서 2021 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 움직임을 중심으로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로 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정부 기능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 산업은행은 향후 수출입은행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는 것을 내비쳤다.

코로나-19 에 관해서 ESCAP 에서 도출되었던 결의안이 있었다. 이 결의안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하고자 결정했던 내용은, 팬데믹 때문에 생긴 입국 제한 완화, 무역(상업) 절차 디지털화, FDI(외국인 투자) 흐름 회복, 코로나 팬데믹이 미래 경제에 미칠 영향 모니터링,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1 번의 경우 입국 제한 완화는 단순히 한 국가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여러 국가들의 백신 접종 상태, 환자 상태 등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단기간 내에는 해외와의 연결에 힘주기보다는 국내 내수시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

코로나-19 로 인해 성장한 메타버스나 디지털 관련 산업의 분야가 많은 국가에서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있다. 몽골 역시 이러한 부분을 캐치해 코로나-19 때문에 수축된 경제 재활과 동시에 새로이 떠오르게 된 산업들에 더욱 박차를 가해 새로운 주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주은(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강연우(인천아라중학교),
박강이소(덕신고등학교)**

팬데믹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소비가 감소하며 경제는 침체가 되고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고 생산과 투자 또한 줄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팬데믹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미래 판데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팬데믹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동안 논의되던 계획도 무너지며 해오던 노력들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 성찰해 보고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는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 ESCAP 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며 이번 팬데믹을 극복해 나갔다.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을 기회 삼아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번 팬데믹 사건의 발상지이며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발상지라는 이유로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으며 국가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며 중국도 피해국임을 이야기하고 싶다. 중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노력해 오던 것을 잠시 덮어두고 봉쇄를 통한 제로코로나를 해오고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넘어간 뒤 일상 회복을 넘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려 노력 중이다. 팬데믹을 통해 사회구조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도 팬데믹 이전보다 많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길거리 거지들도 구걸을 현금이 아닌 가상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은 중국 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기존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경공업, 제조업 등에서 벗어나 반도체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이뤘으며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을 성장시키기도 했다.

ESCAP 은 동북아시아의 많은 발전을 위해 많은 논의와 노력을 해왔다. 이번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구성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럼을 2014 년부터 2024 년까지 11 번의 포럼을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해왔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구축하며 경제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2020 년대 들어 많은 악재들이 겹쳤으며 제조공장들은 중국에서 외부로 나가며 타격이 크다. 그러나 2013 년부터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정치적 경제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부분으로 발전해 오고 노력해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소비 촉진 정책으로, 소득 증대,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소비를 장려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육성하여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내수 시장을 확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국내 기업 간의 M&A 를 장려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박채희(삼산중학교), 이승아(인천외국어고등학교)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제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과 도시 봉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경기침체를 겪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객 증가와 전염병 제재 해제로 경제의 일시적 호황을 보였으나 러우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성장세가 부진하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문제를 안은 일본은 코로나 19 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상승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역대 최대의 경기침체를 기록한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와 환율도 크게 상승하는 등 30 여 년 만에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듯 보였으나 민간 소비 부진과 자동차 업체의 조업 중단으로 경제 성장률이 4 분기 연속 적자가 되었다.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증환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확진자 동선도 공개하지 않는 등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감염병 확대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자, 4 월 7 일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을 발표하고 강제력은 없지만 보다 구체화된 감염병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경제 지원책으로 108 조 엔에 이르는 추가 예산지원도 발표했지만, 향후 일본경제는 침체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정치적인 문제까지 야기했다.

DX, GX, 생성 AI 분야에 대한 투자로 민간기업 설비투자액을 확대하고 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 지원으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2027 년도 스타트업 투자액을 2022년 대비 10배 확산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지역 부흥 가속화 정책을 중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2023 년 5 월부터 백신 접종을 전액 공비 부담에서 65 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정기 접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백신 예방 접종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어 바른 대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5 세 미만인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 결의안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백신 접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기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으로 진행되는 활동을 늘리거나 온라인 쇼핑물 등을 더욱 발전시켜 코로나 확산을 줄이는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 :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문서번호 : ENEA/01/01

의제 :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협력 방안

대표발의국 : 미국

공동발의국 : 대한민국, 몽골, 일본, 중국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2020년 1월 31일 WHO가 선포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재확인하며**, 이로 인한 모든 국가에 팬데믹의 피해를 **상기시키며**, 이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닥칠 팬데믹 상황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동북아시아는 팬데믹 상황을 이겨냈지만 전세계적인 하락세를 **상기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 국가들이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권고한다.

1. 각 국가들 간의 팬데믹 대비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협조를 **촉구한다**;
2.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
3. WHO와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촉구하며, 이는 민간 다국적 부문으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여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지원의 실행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국가별로 지닌 자원을 공유하는 무역망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5. 동북아시아와 이해관계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관계 개선을 **촉구한다**;
6. AI 분야의 기술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개발을 **목표로 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국가별로 내 지방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요청하며 이를 공유할 포럼 개발을 **목표로 한다**;

8. 국가들이 경제적 성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통합된 호소에 신속하고 관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9. 회원국들에게 팬데믹의 전 세계적인 경제적, 사회적 여파를 감소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협력 방안

UN ESCAP 열자는 동향자료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결의안 소개

ENEA/01/01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협력 방안







결의 배경

- 2020년 1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세계 위기 선포
- 2020년 9월 유엔 개발계획(UNDP)가 '2020년 세계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 필요성 인식

기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협력의 필요성

결의 실행

교류
행정성·사회적 개발되고
수요를 조망하여
지속가능, 포용
경제를 마련함

소통
정책의 실행
국제적인 성과를 위한
소통 플랫폼 활용
다문화교류의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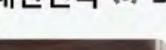
활성화
기타·다문화·국제
포용적 경제의
발전적 가치 실현
문제 개선



대한민국 🇰🇷 의 입장

 경제 회복과 디지털 전환

 K-방역의 글로벌 위상



대응 방식에서의 문제점

- 국제적 보건 협력 미비
- 정보 불균형
- 백신 및 의료 자원의 불균등 배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

대한민국의 최종 주장

엔터테인먼트 공유 네트워크

선언된 대외주권영역

공유권영역

타국 대외주권영역 일부 지역

무명권 지역

몽골의 입장

세계적인 경기 침체

2008년 1-3분기 세계 무역액 (10억 달러)

연도	세계 무역액 (10억 달러)
2007	18.5
2008	12.5

2008-2009년 세계 무역액 (10억 달러)

연도	세계 무역액 (10억 달러)
2008	12.5
2009	13.5

2008년 1-3분기 세계 무역액 (10억 달러)에 비해 2009년 1-3분기 세계 무역액 (10억 달러)이 증가함

몽골의 입장

● **중국을 통한 무역량 회복 시도**

몽골은 고물가 1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이며 왜곡된 중국을 통해 경제 회복을 시도합니다.

순위	국가	2015-2016 HDI
1위	노르웨이	0.943(0.94)
2위	홍콩	0.939(0.94)
3위	영국	0.938(0.94)
4위	스웨덴	0.937(0.94)
5위	일본	0.936(0.94)
6위	스위스	0.935(0.94)
7위	독일	0.934(0.94)
8위	네덜란드	0.933(0.94)
9위	아일랜드	0.932(0.94)
10위	벨기에	0.931(0.94)
11위	프랑스	0.930(0.94)
12위	캐나다	0.929(0.94)
13위	미국	0.928(0.94)
14위	핀란드	0.927(0.94)
15위	뉴질랜드	0.926(0.94)
16위	오스트리아	0.925(0.94)
17위	이탈리아	0.924(0.94)
18위	포르투갈	0.923(0.94)
19위	스페인	0.922(0.94)
20위	그리스	0.921(0.94)
21위	영국	0.920(0.94)
22위	일본	0.919(0.94)
23위	독일	0.918(0.94)
24위	프랑스	0.917(0.94)
25위	캐나다	0.916(0.94)
26위	미국	0.915(0.94)
27위	핀란드	0.914(0.94)
28위	뉴질랜드	0.913(0.94)
29위	오스트리아	0.912(0.94)
30위	이탈리아	0.911(0.94)
31위	포르투갈	0.910(0.94)
32위	스페인	0.909(0.94)
33위	그리스	0.908(0.94)
34위	영국	0.907(0.94)
35위	일본	0.906(0.94)
36위	독일	0.905(0.94)
37위	프랑스	0.904(0.94)
38위	캐나다	0.903(0.94)
39위	미국	0.902(0.94)
40위	핀란드	0.901(0.94)
41위	뉴질랜드	0.900(0.94)
42위	오스트리아	0.899(0.94)
43위	이탈리아	0.898(0.94)
44위	포르투갈	0.897(0.94)
45위	스페인	0.896(0.94)
46위	그리스	0.895(0.94)
47위	영국	0.894(0.94)
48위	일본	0.893(0.94)
49위	독일	0.892(0.94)
50위	프랑스	0.891(0.94)
51위	캐나다	0.890(0.94)
52위	미국	0.889(0.94)
53위	핀란드	0.888(0.94)
54위	뉴질랜드	0.887(0.94)
55위	오스트리아	0.886(0.94)
56위	이탈리아	0.885(0.94)
57위	포르투갈	0.884(0.94)
58위	스페인	0.883(0.94)
59위	그리스	0.882(0.94)
60위	영국	0.881(0.94)
61위	일본	0.880(0.94)
62위	독일	0.879(0.94)
63위	프랑스	0.878(0.94)
64위	캐나다	0.877(0.94)
65위	미국	0.876(0.94)
66위	핀란드	0.875(0.94)
67위	뉴질랜드	0.874(0.94)
68위	오스트리아	0.873(0.94)
69위	이탈리아	0.872(0.94)
70위	포르투갈	0.871(0.94)
71위	스페인	0.870(0.94)
72위	그리스	0.869(0.94)
73위	영국	0.868(0.94)
74위	일본	0.867(0.94)
75위	독일	0.866(0.94)
76위	프랑스	0.865(0.94)
77위	캐나다	0.864(0.94)
78위	미국	0.863(0.94)
79위	핀란드	0.862(0.94)
80위	뉴질랜드	0.861(0.94)
81위	오스트리아	0.860(0.94)
82위	이탈리아	0.859(0.94)
83위	포르투갈	0.858(0.94)
84위	스페인	0.857(0.94)
85위	그리스	0.856(0.94)
86위	영국	0.855(0.94)
87위	일본	0.854(0.94)
88위	독일	0.853(0.94)
89위	프랑스	0.852(0.94)
90위	캐나다	0.851(0.94)
91위	미국	0.850(0.94)
92위	핀란드	0.849(0.94)
93위	뉴질랜드	0.848(0.94)
94위	오스트리아	0.847(0.94)
95위	이탈리아	0.846(0.94)
96위	포르투갈	0.845(0.94)
97위</		

[illegible]

몽골의 최종 주장



-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 회복 노력
- 새로운 성장 산업에 투자자와 경제 성장
- 생명과 자원 등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

중국 中国 의 입장



- 경제 구조
 - 수출에 의존
- 현재 경제 상황
 - 미국과의 무역 갈등
 - 경제속도 둔화

코로나19와 중국



전염 간 내림 → 글로벌 공급망 파괴 → 전 세계적 경제위기

중국의 최종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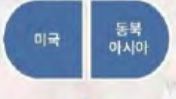
전통시장 내보내고 중국 + 무역망 구축 + 국가간의 경제적 교류속도 증대

미국 美国 의 입장



- 동북아시아와 많은 이해관계에 있음
- 팬데믹 이후 동북아시아와의 협력 감소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기대

다른 국가와의 입장 차이



미국 vs 동북 아시아

중국의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협력 방안 중시

책에의 이데오 인한 경제협력 목적 및 경제 발전 중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통한 경제발전 향상 유도

미국의 최종 주장



- 기술 공유 파트너십
- 거버넌스 신설
- 환경 개선

서민들의 기술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지방 정부와 스타트업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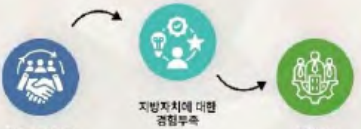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와 이 해를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日本 의 입장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 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약재
-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

부족한 지방자치



타 국가에 비해 큰 재정 의존도 →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 부족 → 거버넌스 체계 정비

일본의 최종 주장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 부족한 지방자치
- 부진했던 국제적 대응

AI 일본의 기술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지방정부와 소문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경제력의 선 제가인 중 지역 사회의 미래를 감소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조직을 것을 요청했다.

유엔거버넌스센터(UN POG)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

재난 위험은 기후 변화, 도시화,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 전염병, 기후 재난 등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며, 한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난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취약한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각국은 재난 대응 경험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재난 방지, 대비, 복구 과정에서의 기술, 정보, 정책 협력은 재난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예준(용현중학교), 안현수(부원여자중학교),
오주희(부원여자중학교), 이소율(진산중학교)**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3 분의 1 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고, 홍수 범람, 폭우와 같은 물과 관련된 재해에 취약한 국가다. 1953 년의 대홍수 때는 1,835 명이 희생되고 10 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해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일의 영향을 받아 실시한 것이 바로 대대적인 해안 보호 작전인 '델타 프로젝트'이다. 이것을 계기로 라인강과 뉘르강 하류의 로테르담과 제이란드 등 델타 지역에 300 여 개의 구조물과 약 16,000km 의 제방이 건설되었다. 또한 무너진 방조제 보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등 높은 시민 역량을 발휘하였다. 델타 프로젝트는 해일 등의 자연재해를 넘어 기후 변화 등 미래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고, 네덜란드는 이런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라 내부의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 체계 중 대표적으로 농업용수의 질이 향상됐고, 델타 지역의 물 조절이 보다 쉬워졌다. 또한, 섬과 반도 사이에 교통로를 제공하며, 내륙 수로 선적이 원활해졌다. 네덜란드는 물과 관련된 재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연재해들을 해결한 것을 넘어서, 세계은행, 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방조제 건설 기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세계에 수출하는 분위기이다. 네덜란드는 '물 문제 해결사'로 소문나 있기도 하다.

네덜란드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네덜란드는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다양한 결과물을 내세웠다. 국내적인 정책으로는 '델타 프로젝트'로, 댐 등의 시설을 설치해 네덜란드의 침수와 범람을 막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적인 정책뿐 아니라 네덜란드 정부는 대외적으로 다양한 협력을 표명하며 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의 홍수 이후 네덜란드는 벨기에, 독일과 함께 기후변화로 증대되는 위험에 대응하고자 공동연구 조직을 신설했다. 이들은 국경 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비상 대응, 다층적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재난을 해결하는 국내적, 대외적 자세를 보아 네덜란드의 입장을 고려해 보자면, 국내적인 노력뿐 아니라 국제적인 전(全) 지구 공동체적 협력이 있어야만 재난 위험 감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자국 스스로도 재난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주변 저지대의 베네룩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입장은 단순히 국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과거 행보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네덜란드는 1953 년 대홍수 이후로 델타 프로그램을 추진해, 많은 방수 시설을 만들어 홍수로부터 나라를 보호했다. 네덜란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기도 겪었다. 그에 따라 방수 시설들을 보완해 해수면이 상승하더라도 국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추가로 여러 프로젝트를 주위 나라들과 논의하였다. 둘째, '부유식 인공섬' 으로, 여러 작은 인공 섬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토가 바다에 잠길 위기에 처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논의 중인 대책으로, 네덜란드는 이 나라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셋째, UN 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중 가장 우세한 의견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여러 대책들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실제로 시행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시행하고 있는 첫 번째 정책은, 토지 정책이다. 재난관리 웹사이트에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바다나 강이 범람 시 예상되는 주소지별 피해 강도와 대피방법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네덜란드 정부는 주요 운하 인근의 땅을 사들여 확보된 토지를 유사시 범람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셋째, 학교에서는 남부 지역의 제방과 댐을 중요한 견학 장소로 꼽아 홍수로 인한 위험과 대응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넷째, 네덜란드는 국제적으로 ComCoast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을 포함한 연안선진국에서는 2000 년대 초반부터 해수면 상승에 적응한 해안보호 및 홍수방지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해연안에 위치한 5 개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덴마크) 10 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ComCoast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ComCoast 프로젝트는 연구, 현장조사, 실행과 같은 세 가지의 토목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다기능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보호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적응 프로젝트를 통한 장기적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네덜란드는 제방전면 보강 및 해수 유통을 통해 습지를 조성하는 등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재난관리 웹사이트(overstoomik.nl)를 통해 주민들이 바다나 강이 범람 시 예상되는 주소지별 피해 정도와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21년부터 암스테르담 운하 등 주요 운하 인근의 부지를 사들여 유사시 범람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될 경우 가장 피해가 극심한 네덜란드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땅이 잠겨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의논하고 결정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인공 섬이라는 방법을 고안해 적용했다. 하지만 인공 섬은 해상 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오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또한 인공섬이 지어진 곳에 사는 해양생물은 질식사해서 죽을 수 있기에 되려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네덜란드가 추진 중인 부유식 인공섬은 말 그대로 물 위에 떠있는 섬이기 때문에 수위에 따라 섬이 떠다녀 수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섬이 잠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한 파도나 밀물과 썰물, 태풍으로 인해 인공섬이 떠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과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해결방안으로는 네덜란드에서 물이 많이 범람하는 지역에 연꽃 같은 수중 식물들을 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주변에 물이 많기에 이 부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물에 땅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는 것보다 아예 물에 식물을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물에 식물을 키우면 홍수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할 때는 수중식물의 영향으로 범람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연꽃 같은 식물은 꽃이나 잎, 심지어 그 뿌리까지 판매할 수 있기에, 수출로도 자연재해를 막는 목적으로도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여 네덜란드가 취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는 수륙 양용 주택이 있다. 수륙 양용 주택이란 평소에는 수면 아래 땅에 고정되어 있지만 홍수나 폭우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서 뜰 수 있는 가옥 형태이다. 수상 가옥과는 달리 평소에는 땅에 고정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일반 주택과 다를 게 없다. 또한 2.5m 높이까지 뜰 수 있고, 뜬다 해도 수도와 전기 같은 제반 시설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고은(청호중학교), 김하은(옥련여자고등학교),
정제이(인천신정중학교)**

재난 위험 감소(DRR)는 점점 증가하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에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기후 변화, 도시화, 환경 파괴 등은 자연재해의 빈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재난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의 “센다이 재난 위험 감소 프레임워크 2015-2030”이 있으며, 이는 재난 위험 관리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재난 예방, 위험 평가, 복구 계획, 지역 사회 회복력 강화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과 같은 국제 금융 기구들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발생 시 빠른 복구가 가능하도록 금융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같은 기관들은 기술적 지원과 긴급 구호 자금을 제공하며,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빈민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협력 속에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의 심화와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해 재난 위험 감소를 필수적인 글로벌 의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재난 위험 감소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난 위험이 높은 국가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후 신속한 복구뿐만 아니라 재난 이전에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국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 감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재난 위험 감소(DRR)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서, 우리는 단독으로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유엔의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재난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예방이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단순히 재난 발생 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난 예방과 복구 계획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리는 세계은행, IMF,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 금융 기구들의 재정적 지원이 재난 발생 시 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EU)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같은 기관들의 기술적 지원은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미니카 공화국과 같은 재난 위험이 높은 국가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이러한 국가들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재난 위험 감소가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가 협력을 통해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재난 위험 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건축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재난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2022년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제적 회복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유럽 연합(EU)은 도미니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재난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 적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은 남북 아메리카의 16개국에서 온 재난 위험 관리 전문가 35명을 등용해 재난위험도 경감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위험도 관리 국립학교를 통해 각국에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위험도 경감 계획에 대한 인식을 알리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며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관계를 강화시킨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재난 위험 감소(DRR)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국제 회담과 외교 채널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2022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 COP27에서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 감소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회의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중·저소득 국가들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다.

또한, 2023년 5월 카리브 공동체(CARICOM) 정상 회담에서는 지역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23년 9월에 열린 중미 통합체제(SICA) 정상 회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의

통합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유엔의 "센다이 재난 위험 감소 프레임워크 2015-2030"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연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적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외교적으로 세계은행, IMF,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협력이 자국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의 "국제 협력 및 재난 관리" 섹션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국제 협력 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은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 감소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로 보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참여한 기후 재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협정인 파리기후 협정에서는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인 1.5 도를 달성하기 위해 2030 년 까지 2010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필요한 상황이나, 당사국들이 미리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에 명시된 감축 목표를 전부 이행한다 해도 2030 년 배출량이 2010 년 대비 오히려 13.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각 당사국에 2022 년까지 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하여 자발적 기여(INDC) 방안을 제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필요성은 에너지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10 년 전부터 부각되었으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국가 사회적 대응 방안은 경제적, 기술적 문제로 미진하다. 그 이유로 중남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자원조달의 한계, 전력사업의 독과점으로 대표되는 공공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약,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 미비 등이 있다. 특히, 대다수 ESCO 기업이 서비스 요금에 의존한 소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원 조달에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추진 체계는 대부분 정부 부처나 국영기업 등이 관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투자자금 마련이 불가할 정도로 에너지 절약 산업 기반이 미약하다.

또한, 공공서비스 산업(전력 및 가스 공급업 등) 접근성에 대한 법제도 제약으로 ESCO 기업의 활동 범위는 제한적이며, ESCO 기업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 에너지 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주로 국가 재정에 의존하고 에너지 효율 관련 자금 확보를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자발적 기여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이행 조건들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1. 비조건적 자발적 개선을 조건적 전환 요구
2. 금융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저금리 적용과 대출 보증에 대한 제한을 두어 에너지 투자 활동 증진을 위한 기구 설립
3.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개발 연구소 설립

UNEP 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국이 비조건적 자발적 기여(INDC)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지구온도 2 도 목표 배출량의 간극은 14 GtCO₂ 에 이를 전망이지만 2015 년 유엔 기수 변화 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비조건적인 자발적 기여를 이행할 경우 2030 년의 세계 배출량은 56 GtCO₂ 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30 년 배출량 2 도 이내 목표달성에 필요한 배출량(42 GtCO₂)과 14 GtCO₂(12~17 GtCO₂)의 격차가 발생하는 수치이다. 이에 반하여 각국이 조건적인 자발적 기여 시 2030 년 발생하는 배출량은 54 GtCO₂ 에 이르러 비조건적 자발적 기여 대비 2 GtCO₂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요건이 의무화되고 여러 국가들이 조건적 자발적 기여로 전환함으로써 자발적 기여 미제출 국가들의 참여 또한 이끌어낼 수 있다면 2030 년 배출 간극은 1 GtCO₂ 로 축소될 수 있다.

금융 시스템 개선을 이행할 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가 보유한 외화량을 늘리게 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원활히 순환시켜 금융 경제력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하여 전용 기금을 모금하는 시스템 또한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된 국가 보조금이 소비자 혜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 사업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을 감소하고 수익성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로부터 플라스틱 분해 효소 유전자를 추출해서 그것을 플랑크톤에 맞게 개량한 후 유전자 형질전환을 통해 새로운 플라스틱 분해 플랑크톤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수생 생태계 1 차 생산자로서 빛으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합성해 전체 먹이사슬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수생 생태계의 연쇄 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먹이사슬을 통한 플라스틱 생물농축을 차단할 수 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유해물질 제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며 해양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랑크톤을 연구팀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페트병을 완전히 분해하는 과정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수생 생태계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 결과이며 전 지구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산 양식이나 해양 생태계 복원 같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미생물 분야 국제학술지 '마이크로 바이얼 셀 팩토리즈'에서 검증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국가와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기술을 받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후속 연구와 상용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새로운 생태학적 연구를 통한 환경개선 분야의 선두국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위치 상 잦은 허리케인 등의 태풍과 스콜 이후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인 해양 쓰레기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도와 국제 경제와 고용환경 개선 등을 촉구할 수 있으며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생태학적인 연구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가 발전 주축 중의 하나인 보건 분야에서 발전 또한 이룰 수 있는 기회이다. 이때 발전시킨 기술의 소유권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음을 확실히 명시한다.



**김찬희(세일고등학교), 정성빈(인천중산중학교),
조현우(청호중학교), 최승준(인천신정중학교)**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재난이라고 하며, 이 재난 위험은 인간을 늘 불안에 떨게 하는 원인이다. 오늘날 이 재난위험은 특별한 사건이 아닌 세계 각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상이 되었다.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은 끊임없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과학 기술연구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 결과 재난위험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위험으로 여기며, 재난 발생 시 국가 간 긴급 구호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 재해 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의 면적이 대한민국의 100 배 가까이 크다 보니 지역별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유형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북쪽지역은 한파로 극성이지만 중부지역은 허리케인과 우박, 서부지역은 지진,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넓은 영토의 자연재해 발생이다 보니 경제적 피해 또한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며 고향을 떠나는 기후 이민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은 환경 보전과 보호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 정부가 재난관리 책임을 맡고, 주 정부는 연방 정부나 재난 관련 기관과 협조해 지방정부의 재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재난 발생 초기에 효율적인 지휘감독을 하게 된다. 미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중앙과 지방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 체계적인 방재정보 시스템과 재해 대책 포털 운영으로 국가 위기 상황 발생시 협력을 효과적으로 하게 한다.

미국은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 년에는 재난피해를 근원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 재난 경감법을, 2002 년에는 9.11 사태와 같은 대규모 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 국토안보부법을 부문별로 제정하여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2003 년에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하였다. 국토안보부(DHS)는 기존의 대통령 자문기관이었던 국토안보실(Office of Homeland Security)이 승격되어 세관, 이민국, 해양수비대, 교통보안국, 연방위기관리청 (FEMA) 등 22 개 연방기관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국토안보부(DHS)는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유연하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경, 교통부문, 항만 및 국가핵심기반체계를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2015) 보고서에 의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USCIS), 미국연안 경비국(USCG),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 미국비밀경호국(USSS), 교통안전국(TSA) 등의 주요 부서로 나누어져 각각의 주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재난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UNISDR, 샌다이 프레임워크, 파리기후협정 등 다양한 국제 협의체에서 미국은 재정적,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재난 위험 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후 변화, 재난 위험 데이터 공유,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재난 위험 관리와 기술적 지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풍부한 재난 관리 경험과 강력한 재난 대응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한다. 특히 연방비상관리청(FEMA), 미국 지질조사국(USGS),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다양한 연방 기관이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와 기술을 제공하며, 재난 위험 평가 및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재난 위험 감소와 기후 변화 대응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은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복구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파리협정은 2015 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 곳곳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협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 년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2020 년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2021 년 파리협정에 다시 복귀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재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1 년 4 월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 세계를 결집시키기 위해 40 명의 세계 지도자들을 화상으로 기후에 관한 정상회담을 소집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야심 찬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발표하여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 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배출량 감소에 전념하도록 했다.

미국재난관리 체계의 특징은 위기관리의 통합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위험관리 프로그램 평가 및 계획 프로그램 구축 신속한 재난 알림 서비스, 협업 및 체계적인 재난 교육활동 수행 등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재난들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지방정부자체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특급 재난과 같이 주 정부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지원을 요청한다. 미국은 2002 년 국토안보부를 창설하면서 위기와 재난 대응 부서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고 이에 연방재난관리청도 2003 년 3월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통합하게 된다. 2005년 8월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해 연방재난관리청이 초기 대응에 부신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현재 미국은 재난대응에 대한 선진국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 FEMA 에서는 위험 경감 보조 프로그램(HMGP)을 실행하여 재난 이후 연방 정부가 주 및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통해 향후 재난 피해를 줄인다. 뿐만 아니라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미국의 국토안보부(DHS)는 특히 인위적 재난인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제 3 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에서 채택된 센다이 강령은 재난 감축을 위한 각국의 행동지침으로, 노출특성과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 목표는 2030 년까지 다음 7 가지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재난 사망자 수의 상당한 감소, 재난 영향을 받는 인구의 감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 피해의 감소, 핵심 시설의 복원력 증진, 국가 및 지방 단위의 재난 위험도 감소 전략 수립, 개발도상국의 강령 이행 지원, 대중의 조기경보 시스템 및 위험정보 접근성 증진이 있다.

또한, 우선이행과제로는 재난 위험 이해, 위험도 거버넌스 강화, 재난 위험도 감소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과학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센다이 강령에서 국가적 협력 이외에도 더더욱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UN 과 같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기관의 힘을 빌려 비정부 조직, 시민 단체 등과 같이 미시적 측면에서의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면 재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적 재난 상황 경우에는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딜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관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보 공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비정부 조직, 시민 단체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재난 위험 감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재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반인들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재난 예방 조치가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 조치에 관해서 특히 일반인들에게 이루어진 재난 예방 교육 측면에서 실질적 예방 효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측면 즉, 맹점이 없는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경서(세일고등학교), 이하정(계산여자중학교), 최하늘(인천산곡고등학교)

본국 인도네시아는 통칭 '불의 고리' 라 불리는 지구상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밀집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활화산이 많으며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4 년의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 이후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지원과 협력이 활발해졌다. 또한 ASEAN(동아시아 국가연합)내에서 재난 대응과 구호 활동을 조정해 주는 등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덧붙여 기후 위기의 가속화도 재난의 발발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국제적인 기후협약 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위치적 단점이 있는 만큼 국제적인 지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이상적이나, 술라웨시 중부에서 발생했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사망자 2088 명, 실종자 5000 명 아성, 부상자 10000 명 이상, 8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엄청난 인력 손실을 맞게 되었다. 대책을 세우고 수습 진행을 위한 공무원들 또한 상당수 사망하였기에 수색 작업은 난항을 띄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은 사실상 사망자로 간주한다고 발표하며 10 월 11 일 공식적 구조 활동을 중단했으며 피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와 외국인 자원 봉사자들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등 국제 NGO 와 외국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도네시아의 재난 대처 능력의 해외 노출을 꺼린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국은 2004 년 남아시아 부근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대지진의 여파로 큰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입은 바가 있기에 해당 사건으로 본 국과 여타국의 열악한 재난 경보 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유럽연합과의 협업으로 재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유네스코에 재난 당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재난을 대처하고 관리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세계 과학 기술인들은 지금도 인도양 쓰나미 연구를 바탕으로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이는 1 차적으로 자연재해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개발에 꼭 필요한 자료이자, 이후 세대들을 위한 크나큰 배려임을 알 수 있다.

현 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 대응 공공의료 체계 역량강화 사업'으로 목적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국가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재난관리체계 관련 물적-제도적-인적 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부당 분담사항은 중앙-지방정부의 재난대응 의료관리 체계 구축, 소외계층의 재난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의료시설의 재난-감염병 대응 인프라 및 인력 구축, 지역 사회의 재난-감염병 대응 회복력 향상이 있다 보건, 보건증진 SDGs 의 분야이며 이 사업을 통해 재난 후유증 완화 및 보건 지원의 균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효고 행동강령은 2004 년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유엔이 채택한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2005 년 1 월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서 열린 제 2 차 “재난 위험 경감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것은 2005 년부터 2015 년까지 재해위험에 대비하는 국제 공조 체계를 강조하고 5 가지 행동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실천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위험 감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우선사항이 되어야 하며 실행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바탕이 필요하다.
2. 자기 도시의 재난위험을 인식하며 재난위험을 식별-평가-점검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강화한다.
3. 지식-혁신-교육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안전하고 재생 가능한 문화를 만든다.
4. 내재된 위험요소를 줄인다.
5.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 대비를 강화한다.

하지만 효고 행동강령은 목표설정과 국가 책무성, 지역국가별 참여와 조정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보인다. 이는 방향성과 진행 상황 측정에 어려움이 될 수 있기에 효율적인 문제해결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장 크게 인지되는 문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못한 것이기에 위 강령의 명확화를 위해 각 국의 협의를 통한 목표 지표를 설정한 후 정기적인 확인을 받는 절차와 덧붙여 이러한 행동 강령은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편이 각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에 도움이 되며 재난 상황 시 시민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어 주기적인 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로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응은 최대한 빠른 대처를 수반하는 편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기때문에 정부 내에서 재난 상황 알리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이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승연(진산중학교), 양지수(인천논현고등학교),
이세준(세일고등학교), 정서윤(능허대중학교)**

전 세계적으로 지진, 쓰나미, 홍수, 산사태, 화산폭발, 가뭄, 비황(飛蝗)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괴 및 사회적·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UN 에서는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인 재해위험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RR)를 도입해 재난에 대비하여 도시 계획을 하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000 년 재해 경감을 위한 유엔신탁자금이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조성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9 개국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 년에는 UNISDR 동북아시아 사무소로서 기술지원, 능력개발, 훈련계획, 지원 이니셔티브, 지식정보관리강화, 경험과 성공사례 공유, 제휴 및 협력관계 고치를 통해 효고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3 년에는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해경감 협력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협약체결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2005-2015 효고행동계획(HFA)의 후속으로 2015 년 이후 UN 세계 재해경감의 전략적 지침으로 작용할 'Post-2015 재해경감 프레임워크' 수립이었다.

이러한 UN ISDR 와 같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 및 운영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른 재해 감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일본은 3.11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계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3.11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규모가 매우 컸으며 쓰나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진 발생 직후 몇 초 내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쓰나미 방어벽을 포함한 해안선 보호시설을 강화하고, 방재 지역제 및 방조제, 내화 및 내파 건축물, 방재시설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재해에 대비한 체계를 재정립했다.

또한, 지진으로 발생한 인명피해, 피난민 확인, 방사능 오염, 정전 등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GIS(지리정보 시스템)를 활용한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긴급대응 능력을 높였다. 에너지 체계 역시 분산 및 보완하여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어느 국가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 감소를 위한 협의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재해 복구 센터 가 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4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

1. 도시 복원력 강화-도시 인프라의 복원력에 중점을 둔 재난 대응능력 향상

2. 재난 예방교육-VR을 기반으로 한 대응 교육
3. 기후 변화 대응-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개발
4. 파트너십, 네트워킹-아시아 태평양지역의 38개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회의 개최

이러한 프로젝트로 지진이 잦은 일본에 내진설계와, 지진 조기경보와 같은 시스템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으로 다른 나라와 대응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술과 도구들을 만들고,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것 외에도 현재 일본은 국제 원자력기구와의 협력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자력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방사능 오염문제에 계속하여 힘쓰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재난 감소와 극복을 위하여 구조대나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도움을 주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일본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대책기본법은 일본의 재해대책 관련 법률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1959년 이세만 태풍을 계기로 1961년에 제정되었음.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지의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① 방재 책임의 명확화, ② 방재 체제의 정비 방재계획의 정비, ③ 재해 예방대책, ④ 재해 응급 대책, ⑤ 재해복구대책, ⑥ 재정금융조치, ⑦ 재해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등을 담고 있음.
2. 일본과 브라질의 글로벌메커니즘으로 1969년부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일본의 고베는 자매도시 교류 제휴를 통해 지진 대비 및 재난 대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음.
3.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으로 FOIP를 통해 공통의 문제인 기후변화/환경, 식량안보, 보건, 재난 예방/대응 및 사이버 등 전지구적 공통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하고 있음.

2015년 일본의 센다이에서 센다이 강령 혹은 센다이프레임워크라 불리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센다이 강령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재난기존의 위험뿐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과 회복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해 사회복원력을 증진시키자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7개의 항목을 제시한다.

1. 재난 사망자의 상당한 감소 달성: 2005~2015년 기간 대비 2020~2030년 기간 동안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추정

2. 재난으로부터 영향받는 인구의 상당한 감소 달성: 2005~2015 년 기간 대비 2020~2030 년 기간 동안 인구 10 만 명당 영향인구수 측정
3. 직접적인 경제 피해의 감소: GDP 대비 경제 피해액 측정
4. 핵심시설의 피해 및 기초서비스(의료 및 교육시설 포함) 붕괴를 막기 위한 복원력 증진
5. 2020 년까지 국가단위와 지방단위에서 재난위험도 감소전략 수립
6. 개발도상국가가 강령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지원
7. 일반 대중에게 조기경보 시스템, 위험정보 및 평가의 접근성을 증진

이러한 센다이 강령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센다이 강령의 문제점 역시 뚜렷한데 센다이 강령은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각국의 정책과 접근 방식이 상이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통합된 대응이 어렵다. 또한 국가 간 지역 간 정부와 시민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재난 상황 발생 시의 효과적인 대응 및 예방의 어려움이 있다.

센다이 강령의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국가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재난, 재해 상황의 데이터 공유 및 특정 재해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재난, 재해의 대처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국가에 교육 파견을 통해 재난 상황의 효과적 대처 및 예방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재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시 센다이 강령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센다이 강령의 문제점은 대부분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보, 재정 등 수많은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 힘써야 한다.

위원회 : 유엔거버넌스센터

문서번호 : UPG/04/01

의제 :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

대표발의국 : 일본

공동발의국 : 네덜란드,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인도네시아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는,

모든 국가는 센다이 프레임 워크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세계 재난 사태에 대한 정치, 경제, 민간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다.

2005 년 1 월 효고행동강령을 재확인하며, 이는 재난 위험 요인과 재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사회의 필연적 협력임에 유의한다.

현재의 재난 대책이 정보 격차에 따른 차등된 피해를 양산함을 인식하며, 새로운 방식의 재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며,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언론계, 학계 및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아울러 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따라서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는 재난 위험 감소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1.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
2.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각국의 재난 위험 관리 자금 조달 기구 설립에 동의한다;
3.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험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 발생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요청한다;
4.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의 지원을 권고한다;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 위험 감소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한 해결방안을 채택한다.

유엔거버넌스센터 (UNPOG)

결정의 발원지로

문서번호: UPG/O4/01
위원회: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의제: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위험 국제적 협력
대표 발의국: 일본(JAPAN)

서문 (Header)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제1차 회의 2024.09.19.



전문 (Pre-ambulatory Clause)



UNPOG는 왜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라는 의제를 논하는가?

01
모든 국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재난 사태에 대한
경제, 정책, 인간 본성적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경감한다.

02
2009년 1월 교토협약
수정문 제정 이래로,
이제 재난 위험 요인과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확고해지고 있다.

03
전 세계의 재난 위험과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확고해지고 있다.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확고해지고 있다.

04
재난 위험, 환경변동,
전쟁, 학제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실행문 (Operative Clause)



실행문(Operative Clauses):

● Clause 0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경감한다.

● Clause 02.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확고해지고 있다.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확고해지고 있다.

국가별 해결방안 Proposal

네덜란드

우리의 2024년 목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재난 위험

재난 위험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국가별 해결방안

국가별 해결방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해결방안

국제적 해결방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이 세계적 디지털 재난 보고 시스템 구축

- 재난 위험에 대한 안전불감증 증대를 예방
- 이러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재난 위험 보고 시스템

02 디지털 연방체 구축

- 재난 위험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
- 국가별 재난 위험 보고 시스템을 연결하여 위험을 보다 쉽게 대응

The diagram illustrates the four pillars of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rranged in a 2x2 grid. Each pillar is represented by a square image with a caption below it. The top-left pillar is 'Government-led' (국채적 협력), showing a large assembly hall. The top-right pillar is 'Market-oriented' (시장주도 경제), showing a network diagram. The bottom-left pillar is 'Government-led' (정부주도 경제), showing a handshake. The bottom-right pillar is 'Market-oriented' (시장주도 경제), showing a network diagram. The entire diagram is framed by a blue border with a wavy line on the left and a spiral line on the right.

국채적 협력	시장주도 경제	정부주도 경제	시장주도 경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	한국 기업 의 경쟁력 강화	한국 기업 의 경쟁력 강화	한국 기업 의 경쟁력 강화

 미국	01 재난 위험 파악 프로그램 지방 정부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의 관심을 높추기 위해 재난 위험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한다. 02 네트워크의 회원국 간의 협력 기후 변화 지구와 비영리기구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후 변화 위험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네트워크 내 회원국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03 사회적 약자의 소외 해결 기후 변화 관련 위험에 대한 자질에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소외된 한층더 취약하여 관련 정책들이 가진 국제적인 책임감을 자극하여 요구한다.
---	---

The diagram consists of two overlapping circles. The left circle is light blue and labeled '선진국' (Advanced Country). The right circle is a darker blue and labeled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The overlapping area in the center is labeled '조건적 Vs. 자발적' (Conditional Vs. Voluntary).



도미니카 공화국 내 에너지 효율 저감

각은 일리 가구를 통해
재난 감소 신임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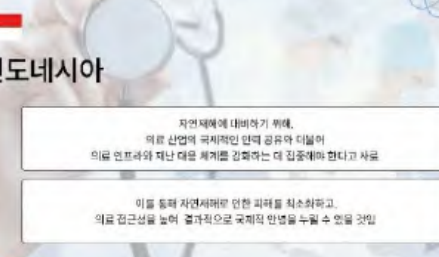
에너지 효율 저감	비율
에너지 효율 저감	70%
에너지 효율 저감	20%
에너지 효율 저감	10%



인도네시아

본남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로, 약 17,0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 영어와 함께, 말라야어와 방글라데시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언어가 사용되고 존재합니다.

지리적 특징	문화적 특징	환경적 특징
- 열대야생의 나라로, 다양한 동식물과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 많은 섬마다 고유한 문화와 언어가 있다.	- 많은 섬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있다.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 많은 섬마다 고유한 문화와 언어가 있다.	- 대부분의 섬마다 열대우림이 있다.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 많은 섬마다 고유한 문화와 언어가 있다.



인도네시아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산업에 긍정적인 면과 공유가 더불어
의료 인프라와 자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사료

이들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 기초를 확고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제적 연대를 누릴 수 있을 것임



일본



일본의 지리

일본은 섬나라로, 동서를 종횡만 단축한 좁고 길쭉한 지형으로, 국토의 70%가 산악 지대이다. 위로는 홋카이도, 동쪽은 태평양, 남쪽은 오키나와 제도에 이른다.

일본 열도(주요 4도)는 수직으로 넓적한 모양을 띠고 있으며, 대륙에서부터 남쪽으로 홋카이도, 본섬, 시코쿠, 규슈로 나뉘어 있다. 그로 인해 하나의 국가지만, 대륙 동아시아와 대륙 동남아시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의 자연환경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은 온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까지 다양하며, 기후는 남쪽을 향해 갈수록 온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로 바뀌어 온대 기후와 열대 기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온대 기후는 점차 열대 기후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국립

- 국제적 협력**
 (아산) 법의 제정법을 통한
 국가법제 개선 추진
 (미국) 국제법
- 실용적인 구호**
 (아산) 법제 개선에 대한
 (미국) 국제법 제정
 (미국) 국제법 제정
- 주요 전략 목표 달성**
 (아산) 법제 개선에 대한
 (미국) 국제법 제정
 (미국) 국제법 제정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접근성과 기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 격차는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회 불균형을 초래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 지원과 인프라 개발을 통해 모든 국가가 디지털 사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다.



김단비(능허대중학교), 김한결(세일고등학교),
이정원(세일고등학교), 장서연(인천현송중학교)

네팔의 디지털 격차는 국가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네팔은 산악 지형이 매우 복잡하며, 인구의 상당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ICT)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가난과 취약한 경제 구조로 인해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 접근성이 부족하다.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 비용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수의 사람들만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현 네팔 정부는 앞으로의 농업, 보건, 교육, 에너지, 관광, 금융 등의 경제 분야성장을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이 10% 상승할 때마다 1.3%의 점진적 경제성장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밝혔듯이 현재 세계은행과 각국의 총체적인 지원을 받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네팔 정부는 2015 년 '디지털 네팔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통신 인프라 확대, 전자 정부 시스템 구축, 디지털 교육 보급 등을 목표로 삼았지만, 제한된 재정과 기술 역량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네팔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사회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국제 통신 연합과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기구들과 협력하여 IC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계은행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네팔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는 주로 기술적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또한, 네팔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글로벌 기술 기업들도 네팔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네팔에 인터넷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세계적으로 5G 기술 도입 및 관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네팔은 아직 전국적인 시범서비스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5G 도입을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 비용은 4G 통신망의 3 배에 달할 만큼 높으며, 특히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진 네팔의 경우 그 구축 비용 및 소요 시간이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되지만 통신 사업자들의 수익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들이 높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5G 통신망 구축에 투자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통신망 인프라 투자에 나서도록 정부가 장려해야 하나, 정부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정부 정책도 미비하다. 또한, 네팔은 아직 4G 통신망 구축도 완료하지 못한 바, 앞으로 농촌 및 산간 지역에서는 4G 통신망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도시를 중심으로 5G 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팔통신국(NTA)은 현재 5G 전략을 수립 중이며, 정부의 투자 계획과 기업의 인프라 투자 촉진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주파수 관련 정책을 승인했으며, 2024 년 중으로 5G 주파수 할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기대되며, 5G 통신망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네팔텔레콤(NTC)은 정부로부터 5G 시범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카트만두, 포카라, 비르건즈에서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5G 통신망 구축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통신사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 당국 및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촌 및 산간 지역까지 동시에 5G 통신망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만큼, NTA 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도시 지역 중심의 통신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는 네팔이 5G 고정 무선 액세스(FWA) 기술을 활용해 산간 소외지역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소외지역의 교육, 보건, 농업 서비스가 확장되면 지방 역량이 강화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팔의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인 Khalti 는 최근 네팔 소비자들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데이터 처리 속도와 신기술 지원 디바이스의 보급이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5G 기술의 조속한 도입이 네팔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과거에 제시된 국제 결의안 중 "디지털 포용성"에 관한 UN 의 결의안이 있었다. 이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자국 내 디지털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과 기술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주로 도심 지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농촌 및 외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지화된 해결책은 부족했다. 이 결의안을 수정하여, 산악 지역과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도 기술 지원과 교육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또한,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험준한 지형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전통적인 광케이블 설치가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외딴 지역에 필요한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구축 자재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네팔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이를 활용해 외딴 지역의 통신 기지국이나 네트워크 타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공급을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또, 주민들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 방법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강민주(진산중학교), 강부경(청람중학교),
황은율(신현여자중학교)**

디지털 격차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의미한다.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에 따라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다시 개인 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격차는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은 과거 농산업에 집중되었으나,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봉제산업과 양코르와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미약한 기반시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경제 전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2024 년 초 기준, 캄보디아의 인터넷 보급률은 56.7%로 기록되었으며, 인터넷 사용률은 78.8%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캄보디아의 디지털화가 꾸준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는 2003 년과 2005 년에 걸쳐 정보 부국과 빈국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했다. 캄보디아는 최근 인건비 상승, 미약한 기반시설, 코로나 19 등의 어려움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이에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4 차 산업혁명과 함께 ICT 산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높은 비중을 바탕으로 ICT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9 년 설립된 Techo Startup Center 는 ICT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이러한 노력을 이끌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Jaringan Prihatin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구에만 집중되었고, 중간층을 비롯한 다른 계층은 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기를 제공받은 이들도 디지털 리터러시나 기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은 캄보디아에 적용할 때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수정될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ITC 산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며, 그 핵심 동력으로 청년층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선진국 청년들과 자국 청년들의 합동 ICT 창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 또한, ITC 산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며, 그 핵심 동력으로 청년층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선진국 청년들과 자국 청년들의 합동 ICT 창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 이전, 무역, 투자를 통해 협력해야 하며, 각국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현(능허대중학교), 남예린(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최강민(대인고등학교), 황은샘(신현여자중학교)**

대한민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거의 모든 가정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노년층에 경우 기기에 관한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유엔, IMF, NGO 등 여러 국제기구가 다양한 노력을 있다.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에서 제시한 2023 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 년 4 대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9%로 2022 년 76.2%, 전년대비 0.7% p 가 상승하였다.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96.5%, 디지털 정보화 활용 79.0%, 디지털 정보화 역량 65.1% 순이며, 수준 상승폭은 활용 1.0% p 상승, 역량 0.6% p 상승, 접근 0.5% p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4 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각 층을 고려하여 조사한 통계자료에서는 고령층 70.7%, 저소득층 96.1%, 장애인 82.8%, 농어민 79.5%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하였을 때 2022 년보다는 2023 년의 디지털격차가 0.7% p 상승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문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활용, 역량, 접근 부분의 역량이 상승하였지만, 4 대 취약계층 중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순으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2023 년 기준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조하여 저조하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2016 년, 유엔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 교육원 개소 10 주년 기념 국제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 기술(ICT)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와 노력을 공유했다. 이 포럼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ICT 기술을 활용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여성 ICT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해 성평등과 경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2022 년에는 Frontiere ICT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및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 기술에 대한 정책 사례와 방향을 공유했다. 이는 개도국들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023 년에는 디지털 리더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리더들과 ICT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사회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디지털 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e-러닝 플랫폼 개발, 디지털 정부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ICT 분야 ODA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UN,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ICT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글로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농촌 지역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직장인, 실직자 등 특정 대상 그룹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해 교육 자원과 교재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규제 협력에 있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시행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도 함께 강화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쉽게 ICT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 프로그램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각, 청각, 지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디지털 기기를 제작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환경 내 포용성을 증대시킬 중요한 방안이다. 저소득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광속 인터넷 망을 개발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예: 디지털 복지사)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문정빈(인천산곡고등학교), 송채원(인천청라중학교),
이영림(능허대중학교), 최준(청량중학교)**

디지털 격차는 콘텐츠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의미한다.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식과 이해 부족,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 현 국제사회는

국가 공동 목표 설정, 협력 강화, 재정 지원, 정책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 공동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에 발맞추고 이에 따른 격차를 해결하려는 상호보완적 국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자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사회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와 기술 발전이 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가의 기술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자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한편, 글로벌 시대의 가장 화두에 오르는 문제인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화웨이 연구 개발 단지인 둥관캠퍼스에서 '지속가능발전(CSD) 포럼'을 개최하였다. 30 여 년 간 화웨이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글로벌 대중화에 전념해 온 결과 사업자와 함께 1,500 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170 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30 억 명 이상의 인구를 연결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에 힘썼다. 더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 17 차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자국에 대한 기술 제한에 나선 미국을 비판하였다. 중국은 'G20 디지털 혁신 협력 행동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G20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균형, 조화, 포용, 협력, 상생, 공동 번영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구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중국은 넓은 대륙과 높은 노년 비율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 민정부, 국민보건위원회는 공동으로 '스마트 건강 노인 돌봄 산업 발전 추진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5 년까지 스마트 헬스케어 및 노인요양 산업의 과학기술 지원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역량을 대폭 향상하며, 시범 실증 구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며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노인 돌봄 수요가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상하이에서는 노인의 지능적 기술 활용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 노인 돌봄 서비스 규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과 업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사용하여 의료, 여행, 결제, 쇼핑,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들의 기술 활용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경제적 격차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남부와 북부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를 강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네트워크 수준을 향상하고, 농촌 주민들의 디지털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 또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5 월,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나노 기술, 양자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시대의 실크로드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거점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심층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취약 계층 학생들도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디지털 교실 및 교육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맞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은 기초부터 고급 수준까지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과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디지털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저개발국이나 디지털 격차가 큰 지역의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현지 교육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의 수업시수를 늘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학생들이 일찍부터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 시스템이나 점자 지원 등의 기능을 고려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기술적 장벽을 겪는 사람들도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SDGs 와 같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를 목표로 하는 SDS(Sustainable Digital Society)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위원회 :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원

문서번호 : UAP/03/01

의제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대표발의국 : 중국

공동발의국 : 대한민국, 네팔, 캄보디아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원(UN-APCICT)은,

유엔 총회 결의안 70/1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기: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된 양질의 교육(SDG 4), 산업, 혁신 및 인프라(SDG 9), 불평등 해소(SDG 10)의 달성을 위해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필수적임을 **상기하며**,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특히 교육, 고용, 의료 서비스 등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네팔과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지형적 특성과 농촌 지역의 분포로 인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확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며**,

대한민국과 중국이 ICT 기술 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있어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특히 네팔과 캄보디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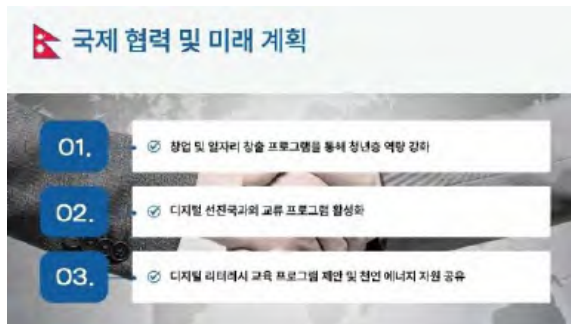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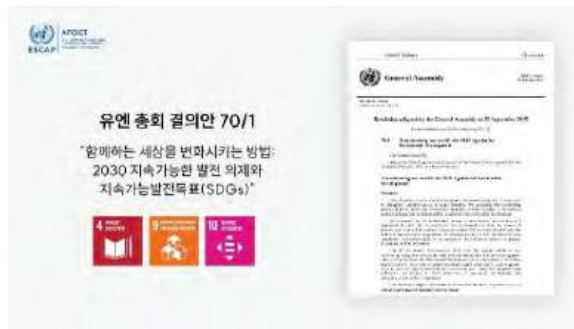
UN 이 제시한 **디지털 협력 로드맵 3 대 가치**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Sustainable Digital Society, SDS)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촉진할 것을 **기대하며**,

2023 년 1 월 16 일의 결의안 A/78/62 를 **재확인하며**, 이는 앞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유엔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네팔과 캄보디아에 디지털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및 전자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2. 네팔과 캄보디아는 천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제공하고, 중국과 대한민국은 태양광 발전소 및 전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ICT 기술을 지원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3.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은 네팔과 캄보디아의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 5G 네트워크 확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지 기술자 양성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를 **촉진한다.**
4. 네팔과 캄보디아의 농촌 지역에서 디지털 복지사를 고용하여,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5. 저궤도 위성 기술과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지형적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 지역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6. 네팔과 캄보디아 청년들의 ICT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한국, 중국 등 선진국 청년들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7.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확산시키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SDS) 구축을 위한 협약을 계획하고 **이행한다.**
8.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SDS)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기술, 자원, 인프라의 교류를 **강화한다.**



🇰🇷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



지금까지의 노력

- 디지털 태움터 프로그램
-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
- 원격 학습 지원
- 디지털 시민권 교육 구축



앞으로의 노력

- 기업·교육·연구 분야 구축 지원
- 지역·연령·소득·지역·성별
- 내·외국인 디지털 교육 지원 강화
- 교육·연구 분야

🇨🇳 중국의 경제와 디지털 격차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디지털 격차 해소 긍정적



넓은 대륙 — 인구 격차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의 노력



보편적 통신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의 노력



현지 전문가 양성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기여





THANK YOU

감사합니다.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

Strategi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e escalating effects of climate change—evidenced by rising temperatures and extreme weather events—underscore the urgent need to reduce carbon emissions as a critical global priority. Emissions from fossil fuels, industrial activities, and deforestation are significant contributors to global warming. In response to the pressing challenge of rapid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aims to limit the temperature rise to 1.5°C and achieve climate targets. To address this, countries must embrace renewable energy, enhance energy efficiency, and adopt sustainable practi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vital for sharing effective strategies and implementing policies that harmonize economic growth with environmental stewardship, ensuring a sustainable future for all.



**강재이(청호중학교), 이한세(청호중학교),
진세아(능허대중학교), 하이안(청호중학교)**

미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 중 하나로, 중국에 이어 2 위에 올랐다. 이후 미국은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협정 복귀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방법률의 입법실패로 기존 연방 법률을 적용하거나 대통령 집행명령권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차의 연료효율기준을 높여왔다. 또한 미국 대표적인 환경법 중 하나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청정 대기법과 1970년대 들어 환경보호청 등 강력한 조치들이 마련해지는 대기질 향상 계획이 만들어졌다. 멸종위기종법,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 관리 등 생물 종의 멸종을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 해왔다. 또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했다. 비록 2017 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에서 탈퇴하였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 년 재가입을 결정했다. 특히 풍력,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2023 년 후쿠시마에서 열린 G7 공동성명을 내며 중국을 견제하고, 2022 년 발표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지침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50% 이상이면 3750 달러를,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한 핵심광물이 40% 이상을 충족해야 3750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지침이 이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준을 재논의하기로 약속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 체계 다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3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배터리 공급 허브의 다자 MOU 체결
2. 리튬 삼각지대 중심의 네오태평양 동맹
3. 국가 배터리 재활용 프로그램 구축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도 배터리 다변화 체제를 위해 힘쓸 것이며 경제적 강대국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차량의 연비 기준을 높인 정책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했지만,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점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연비가 높은 비싼 차량보다 트럭이나 SUV 와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만약 연비 효율을 높이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결의안으로 정책을 수정한다면,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더 환경친화적인 차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상민(청호중학교), 유리한(청호중학교),
장유나(능허대중학교), 한건희(청호중학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부탄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Net Zero 를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게 만들어 순 배출량을 0 으로 만드는 것인데 만약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2021 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화력 발전이 56%로 과거 2019 년 기준 75%와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화력 발전 의존도를 보여 왔다. 이에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늘었고 일본의 스가 총리는 2050 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드러내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탄소로 인한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 문제는 섬나라인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탄소 중립과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2011 년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나오토 칸 총리는 “일본은 핵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결국에는 없애야 한다”라고 하며 국가의 핵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대중 불안이 발생하고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 원자력 발전을 많이 중지하여 원래의 81%였던 화석연료 의존도가 더 늘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크게는 지난 2023 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에서 기시다 총리는 기후 정책과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은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6%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일본의 화석 연료 수입 의존을 인지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일본의 주된 전력원으로 삼고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탄소 가격제와 더불어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경제 성장의 세 가지 목표 동시 달성을 위한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 전략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의 탈탄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어 기후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일본은 700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은 AZEC(아시아제로배출공동체)의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탈탄소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기후 행동을 위해 힘쓸 것이며 기후 금융과 탈탄소화의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고 끊임없이 투자할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2030 년까지 국가 전체 전력 22%에서 24%를 충당하는 정책 (FIT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를 다른 나라에서도 매입해 올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 이유로 2022 년 자국의 전력 구성은 재생에너지는 21.7%, 원자력 5.5%, 화력 72.8%로 절반 이상을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으로 충당한다. 화력 발전을 크게 줄여버린다면 과거에 큰 사고가 터진 적이 있던 원자력 발전을 더 올려야 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은 자국의 국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할뿐더러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제약과 안전 대비 등등 필요한 자금이 훨씬 늘어났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를

다른 나라에서 매입해 올 수 있다면 자국의 목표만이 아닌 공동의 목표인 탄소 중립에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친환경 수송 수단을 대중화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등 복지를 제공해 주면 국가의 재생에너지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시은(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박수하(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최서연(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홍새롬(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Carbon emissions refer to situations where carbon gases, such as carbon dioxide, are emitted into the atmosphere for various reasons, such as using fossil fuels. With global industrialization, the use of fossil fuels increased,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also increased accordingly. However, the number of forests and trees to purify them continued to decrease, resulting in a loss of balance. Natural disasters are occurring throughout the planet. Nepal's Prime Minister Sher Bahadur Deuba says that even Nepal's very small carbon emissions are very badly affected by them.

Nepal is a country that accounts for 0.11%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022, and its contribu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is minimal. However, dependence on biomass energy is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fossil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is slowly increasing. In 2021, Nepal swore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45. This delegate will expand the use of clean energy,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expand carbon absorption through net-zero emissions. Nepal is also trying to apply new technologies to replace fossil energy and promote the transition to bioenergy. To this end, Nepal requests financia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olicy development, social transform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Nepal's carbon dioxide emissions rank 93rd out of 148 countries, and its annual energy consumption is significantly low. Also, there are so many renewable energy resources which are firewood, agricultural residues, livestock manure, hydroelectric power, solar energy wind power, etc.

Therefore, several policies in Nepal utilize these abundant resources. A policy called Nepal's Long-term Strategy for Net-zero Emissions 2021 has been implemented. This is Nepal's strategy for net zero emissions and proposes increasing the use of clean energy and renewable energy and expanding carbon absorption to achieve zero net carbon emissions by 2045. In addition, 264 hydroelectric power development projects approved for construction by the Nepalese government are being promoted.

Nepal needs international bonds t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ur country has been struggling with financial problems that they cannot solve themselv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epal's financial situation is growing but it is very weak with growth rates of 5.72% and 2.92% since 2013. It is growing at 0.2% and 7.74%. In 2015, the earthquake caused the economy to slow down. For this, Nepal ask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financial support for policy development, social transition, and skill development.

One way to reduce carbon is to take advantage of Nepal's geographic feature of forests. About 40% of Nepal consists of forests and trees. This could help reduce the country's carbon footprint. Expand the tourism industry targeting 'green tourism' and use some of the profits for energy development.



김태호(세일고등학교), 소민섭(세일고등학교),
최찬진(세일고등학교)

Carbon emissions mainly refer to greenhouse gase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in the form of carbon dioxide. These emissions cause the greenhouse effect and lead to climate change problems. Countries that emit the most carbon include China, the United States, and India. There is a conflict between developed countries, which focus on both economic growth and solving environmental issues, and developing countries, which prioritize economic growth over environmental improvement.

Our country expresses deep regret about this issue and is determined to solve the carbon emission problem as soon as possible. However, due to China's industrial structure, an

immediate reduction in carbon emissions is difficult. Therefore, we plan to address the problem by gradually establishing policies and setting carbon emission reduction goal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held various discussions to address carbon emissions. Notable examples include the 2015 Paris Agreement and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by 2050. Our country, as a party to both the Paris Agreement and carbon neutrality efforts, has developed polici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set long-term goals. As the world's largest carbon-emitting country, we take responsibility and are working hard to reduce emissions. Additionally, our climate policies have been positively received internationally, and we are continuing to make efforts to solve the carbon emission problem.

First, China is implementing a carbon trading system. China has launched the world's largest carbon trading market, with about 2,000 companies participating and trading around 4 billion tons of carbon emissions. China is also investing in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and clean energy technology to find technical solutions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addition, the country is promoting industrial policies to reduce high-carbon industries and shift to low-carbon industries. China is especially strengthening its efforts to reduce emissions in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Update the resolution to reflect China's current situation, including the latest carbon emission data and recent policy changes. For instance, incorporate China's 2030 peak carbon emission target and 2060 carbon neutrality goal. Additionally, outline specific action plans and steps to achieve reduction targets, such as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and development of clean technologies.

Set annual carbon emission limits and provide tax reductions or financial support to companies that either stay within these limits or significantly reduce their emissions,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businesses to lower their own carbon footprint.



**김민경(인천현송중학교), 박정은(인천청라중학교),
박해밀(옥련여자고등학교), 최은(인천현송중학교)**

Carbon emissions refer to the release of carbon gases, such as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These emissions occur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the production and use of fossil fuels, which contribute to phenomena such as the greenhouse effect. The increasing use of fossil fuels as the world industrializes is a major driver of these emissions. Additionally, as forests and corals—important carbon dioxide absorbers—shrink, the balance is disrupted, leading to higher levels of carbon dioxide. We rely heavily on power plants for electricity, and these plants emit a significant amount of carbon dioxide. For instance, 40%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U.S. come from electricity generation, with thermal power contributing 93% of this amount. The situation is similar with car fuels. Although there are many eco-friendly cars available today, such as electric and hydrogen vehicles, the majority of cars still use gasoline. Burning gasoline releases a substantial amount of carbon dioxide. In fact, electric vehicles accounted for only 18% of global car sales in 2023. Carbon dioxide emissions play a major role in global warming, making up 80% of all greenhouse gases.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has led to 195 countries signing the Paris Agreement in 2015. This international accord aim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well below 2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ideally to 1.5 degrees Celsius.

New Zealand is very focused on tackling climate change for a better future. Even though the country faces some economic difficulties,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ways to cut carbon emissions while still encouraging economic growth. They are doing this by investing in renewable energy and using technologies lik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New Zealand aims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from 2005 levels by 2050, in line with the Paris Climate Agreement. Recently, some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changed temporarily. The current government is trying to boost economic growth by easing some environmental rules, allowing more oil and gas exploration, and relaxing rules on agricultural emissions. This has led to criticism from environmental groups, who worry that these changes might harm long-term sustainability. Despite these issues, New Zealand is still pushing forward with clean energy and new technologies like CCS to help cut emissions and make the transition to a low-emission economy smoother.

In 2016,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globally to reduce carbon emissions to prevent global warming. The agreement aims to limit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below 2°C and to pursue efforts to keep it below 1.5°C. New Zealand aimed to reduce emissions by 50% by 2030. However, New Zealand's carbon emissions continued to rise. Due to reasons such as economic recession, New Zealand postponed its plan to reduce

carbon emissions until 2050.

New Zealand has set a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es by 50% by 2030 compared to 2005 levels in its second emissions reduction plan. This goal is an essential step to minimiz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One key element of the policy is improving energy efficiency.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programs to optimize energy use in buildings and industries. Additionally, it aims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sources like solar and wind power to reduce dependence on fossil fuels. In the transport sector, efforts will focus on improving public transport systems and promoting electric vehicle use to l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plan also emphasizes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aking residents' opinions into account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Regular monitoring and transparent reporting are important to verify the policy's impact and gain public trust. This comprehensive approach will be a significant step toward a sustainable future for all.

Our team would like to build partnerships with more countries to address carbon emissions. New Zealand focused on reducing carbon emissions caused in many fields in very innovative ways. However, the fact that the plan of New Zealand only emphasizes domestic emission. Since carbon emissions have a global impact, it is essential for countries to work together and cooperate closely in addressing this issue. We think New Zealand needs to make an agreement that not only regulates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 but also includes provision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shared commitments with other countries.

One potential solution is the implementation of a carbon tax, which could be introduced as a part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tax would target carbon emissions from various sectors, encouraging industries worldwide to adopt lower-carbon technologie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By raising the cost of carbon-intensive activities, a carbon tax would incentivize the shift toward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technologies. Aligning this approach with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limiting global temperature rise to well below 2°C—could help drive global emissions reductions and fo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action.

Committee Name : NEASPEC

Document No. : NEASPEC/04/01

Agenda : Strategi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Main-Submitter : Japan, China, Nepal

Co-Submitter : USA, New Zealand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cknowledging the urgent need to combat climate change as outlined in the *Paris Agreement*, which calls for significant reductions in global carbon emissions to limit the increa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e unique environmental challenges faced by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cluding rapid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increasing energy demand, which contribute to higher carbon emissions,

Recalling the outcomes of the NEASPEC environmental cooperation framework, which promotes multilateral dialogue and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in address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Emphasizing the role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and the adoption of sustainable technologies in reducing the region's carbon footprint and fostering green growth,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evelop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ies, enhancing energy interconnectivity, and fostering green innovation across borders to mitigate climate change,

Reaffirming the commitment of NEASPEC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its goals, while pursuing regionally specific strategies that address the uniqu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North-East Asia,

Thus, NEASPEC urges member states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ncourages all Member States to adopt region-specific renewable energy goals, similar to Japan's goal of achieving 36% renewable energy by 2030, while providing incentives for industries to shift towards cleaner energy sources, supported by policies like Japan's FIT (Feed-in Tariff) system;

Calls upo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invest in clean energy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fostering partnerships that include:

- a. Technology transfer for solar, wind, geothermal, and hydropower projects, with a focus on regions such as Nepal with substantial renewable energy potential,
- b. Financial support and capacity-building programs aimed at scaling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s per the proposals by Nepal for cooperation in hydropower development;

Supports the creation of joint renewable energy projects between nations, especially between countries with natural resource limitations and those with advance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enabling mutual benefits:

Urge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rameworks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ed by multilateral partnerships involving countries lik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mitigate industrial carbon emissions while transitioning towards sustainable energy sources;

Recommends that countries implement carbon pricing mechanisms, such as carbon taxes or emissions trading systems (ETS), similar to New Zealand's approach, to incentivize the reduction of fossil fuel use and reinvest revenues into green infrastructure, research, and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Encourages the global adoption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and energy-efficient infrastructure initiatives, with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leading efforts to diversify battery production and enhance renewable energy storage capacity through measures like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 multilateral battery supply hub;

Proposes that all Member States commit to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s aimed at advanc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focusing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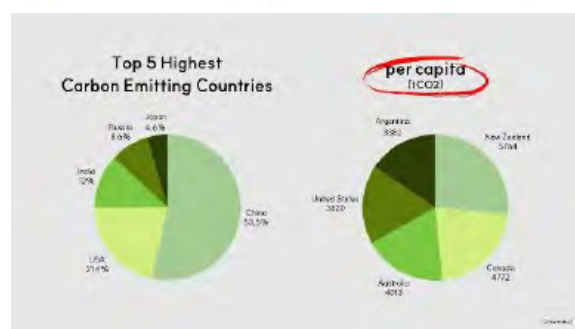
- a. Breakthroughs in solar, wind, and geothermal energy,

b. Enhancing grid stability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Encourages global collaboration to address the disproportionate burden on developing countries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by offering debt relief or financial incentives for nations actively engaging in renewable energy transitions,

Supports the formation of regional and global partnerships for the recycling and reuse of energy infrastructure components, particularly batteries and solar panels, ensuring that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pearhead efforts in creating global standards for sustainable material usage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Requests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and other relevant bodies to facilitate annual reviews of carbon emission reductions and renewable energy adoption progress, with specific attention to the contributions of multilateral initiatives in fostering green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growth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On behalf of... (1)

Establishing Battery Supply Centers



Bridge between US and Partnering Countries





By teaming up,

We can simplify our supply chain and reduce reliance on external sources to ensure all countries benefit.

On behalf of... (2)

Forming a Regional Alliance for Lithium Management



Responsible Sourcing and Sustainable Practices





Li

We can protect our environment while ensuring that all countries have access to vital resources for batteries.

On behalf of... (3)

Launching a Regional Battery Recycl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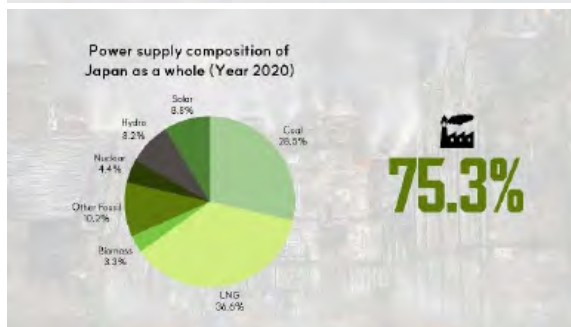
Circular Economy by Reusing Battery Materials





Li

We can minimize waste, recover valuable materials, and contribute to a more sustainable future for all.



On behalf of...

Feed-in Tariff (FIT)



Technology Transfer



On behalf of...

Paris Agreement Target

Main Investment Areas

Primary Focus

Paris Agreement Target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compared to 2005 levels by 2050

Renewable energy,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Enhancing energy efficiency in all aspects. Expanding renewable energy sources (e.g. solar, wind)

Investment in energy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On behalf of...

01. Agreements signed due to financial challenges

50% REDUCTION by 2050

02.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and other sectors

Adoption of clean technologies to reduce emissions in the transport and building sectors

87% of NZ's comes from Renewable sources



87% of NZ's comes from Renewable sources

Recommendations for carbon pricing mechanisms

"Recommends that countries implement carbon pricing mechanisms, such as carbon taxes or Emissions Trading Systems (ETS), similar to New Zealand's approach, to incentivize the reduction of fossil fuel use and reinvest revenues into green infrastructure, research, and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Challenges we faced...

Some countries expressed resistance about imposing carbon taxes due to their current inability.

Developing nations, such as Nepal, raised concerns they face in advancing renewable energy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Proposes that all Member States commit to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s aimed at advanc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focusing on:

- a. Breakthroughs in solar, wind, and geothermal energy
- b. Enhancing grid stability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Practical action to accelerate climate action while creating jobs..."

-Chris Nickles

New Zealand and BioRock join to invest in zero-friendly energy industries such as wind, solar, energy storage (ESS) and hydrogen by receiving funds.



"Encourages global collaboration to address the disproportionate burden on developing countries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by offering debt relief or financial incentives for nations actively engaging in renewable energy transitions."



- rich resources
- lack of funding



financial assistance



- rich resources
- financially stable

Thank You.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Strengthening Democratic Processe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fforts in Addressing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 Election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present significant threats to democratic processes, especially during elections, as they can distort voter perceptions and erode trust in electoral systems. The rise of digital platforms has enabled malicious actors to disseminate false information on a global scale, highlighting the necessi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mbating these challeng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take decisive action against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worldwide. This agenda seeks to promote strategies such as media literacy, fact-checking, and transparency to safeguard electoral integrity and bolster democratic governance.



유준(세일고등학교), 정지후(청호중학교),
조윤성(청호중학교), 최우선(인천중산중학교)

Fake news is information designed to resemble legitimate journalism, intended to mislead or influence public opinion for specific purposes. A key example is deep fakes, which involve using someone's face to create exploitative content. In response to rising deepfake-related crimes, the U.S. government mandated watermarks on deep fake media, with penalties for removal. Major tech companies, including OpenAI and Google, have agreed to jointly address AI-generated disinformation by labeling deceptive content. The European Union also became the first to mandate watermarks on AI-generated content.

During the general election period, President Yoon stated, "There must be thorough measures to ensure that fake news and false information, especially those utilizing AI and digital technologies, do not mislead voters," and urged proactive responses to new challenges like deep fakes. Previously, President Yoon led efforts to swiftly block manipulated

videos that spread on social media and worked with Meta (formerly Facebook), the White House, and other U.S. entities to combat fake news. Minister Park said, "Fake news and false propaganda are serious crimes that distort the choices of the people," and vowed to uncover those behind them and hold them accountable. The Prosecutor General also emphasized, "Falsehoods created through words, writings, and their spread on online platforms and social media are growing like a snowball. To prevent false information, fake news, and black propaganda from influencing election outcomes, swift fact-checking and strict accountability are essential."

Participants of the 3rd Summit for Democracy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fue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et bot technology, not only cause social conflict and division but also threaten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They emphasized the need for robust laws and systems to address fake news and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n international response to forces attempting to influence elections across borders. Furthermore, they agreed to explore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developing AI and digital systems to detect and combat fake new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ully supports this stance.

In 2023,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amended in South Korea. The amendment bans the use of deep fake videos, photos, and audio related to elections during the campaign period, specifically for 90 days leading up to the election day. Violators of this law can face up to 7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7,500. South Korean generative AI company called 'DeepBrain' AI also announced its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o customize detection solutions for tracking deep fakes and responding to election-related crimes.

As for official opin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o far, with the exception of the election law revision, they are somewhat abstract and superficial. More specific and multifaceted policies must be introduced, and measures must be created to more boldl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irst solution proposed by the Republic of Korea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in INTERPOL to respond to crimes related to fake news or creat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ecialized in responding to fake news. A specialized response organization must be created and electoral commission officials and IT experts from each country must be dispatched. By sharing and researching technologies to respond to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fake news,

each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gradually establish a democratic order together. In conclusion, it is urgently necessary for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create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respond to fake news that goes beyond simple election management.



김라온(인천아라중학교), 문영민(세일고등학교),
손태민(청호중학교), 이시윤(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False information or fake news, which is intentionally leaked or infiltrated by double spies to confuse the other party, can distort public opinion, obscure voters' political judgment, and instill an inaccurate image of a specific candidate or political party. This can directly affec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such as fake news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This situation, in which the spread of information is rapidly accelerat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and social media, and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is easily made, is one of the issues that are important internationally. In the United States, false information and fake news have emerged as important political issues since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have introduced various measures to prevent fake news, but this issue has emerged as a big problem in the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as a complete solution has not yet been released. The EU is pursuing various legal and policy responses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false information. In 2018,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was introduc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preven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in cooperation with social media platforms. As such, the issue of false information and fake news is receiving great attention internationally

In Germany, the problem of false information and fake news is also taken seriously. For this, Germany is implementing various solutions, one of which is the Network Enforcement Act (NetzDG). Germany, which was facing an election to the federal parliament, introduced the Network Enforcement Act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in 2017. This law was enacted by the German government to prevent the online spread of illegal content, including false information and hate speech, under which social media platforms are required to delete illegal content within 24 hours of being reported, or they can be fined up to 50 million euros.

The law has contributed to reducing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in Germany, but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criticized for excessively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German government also believes that social media platforms should take greater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nd fake news. So, it requires platforms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can automatically detect and quickly delete false information. Germany is making efforts to provide accurate and verified information through reliable public broadcasting and independent media. Public broadcasters ARD and ZDF are striving to strengthen fact-checking on false information an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citizens

Deep fakes have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for their ability to disseminate misinformation, disrupt elections, and infringe privacy. The United States has identified the potential for deep fakes to be used for political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nd has suggested laws to regulate them in 2019. It is responding by increasing platform accountability and creating technology to detect deep fakes. Following the Cambridge Analytica scandal, the EU identified deepfakes as a crucial component of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through its Digital Services Bill, ordered social media platforms to promptly remove incorrect material and provide warnings on deepfake content. Germany has traditionally been wary of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and the 2020 NetzDG law mandates social media sites to rapidly delete deepfake content. Germany prioritizes privacy and personality rights, and it is aggressively combating deepfakes by developing guidelines for the ethical use of AI technology. Internationally, countries and businesses are focused on technological remedies, with Interpol improving worldwide collaboration to combat deep fake crime and the United States' DARPA creating deepfake detection technologies.

Germany is trying hard to avoid mis- and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Federal Chancellery: The primary focus of the German government has been on IT security, through the creation of “hybrid” working groups within different institutions, integrating experts from various ministries as well as intelligence services. In the Federal Chancellery, there is a working group dedicated to elections that discusses possible crisis scenarios and plans how to better protect critical infrastructure for proper transmission of the election forecast and results. Ministry of Interior: An expert group on “hybrid threats” is also meeting a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with employees of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Foreign Office. The National Cyber Defense Centre in Bonn: Since the end of last year, another working group focused

on the Bundestag elections has been active at the Bonn National Cyber Defense Centre, which deals specifically wit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cyber threats related to the elections.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 (BSI): Just weeks before the elections, the government approved a new cybersecurity strategy for the next five years. In addition, the office has set up what was labeled a “red line” to be in touch with operators of social networks such as Facebook and Google, in order to be able to react quickly to potential security threats if necessary. A unit was also set up to detect automated bots and 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 and to inform the corresponding social media providers so that they can intervene. The BSI is also cooperating with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the Feder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To address the issue effectively, it is crucial to provide a clear definition of deepfake technology and its various forms. This involves specifying the types of digital manipulations that qualify as deep fakes and the methods used to create them. Clear definitions and scope help in crafting precise policies and measures to combat deep fakes, ensuring that all forms of digital deception are covered and individuals, as well as democratic processes, are safeguarded.

Stro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crucial in preventing m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 elections. By sharing information and effective strategies, countries can better tackle these issues collectively. The formation of a global alliance of democratic nations is proposed to monitor and quickly counteract false information. This alliance would serve as a platform for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strategies to protect elections worldwide.

One of the most effective long-term solutions to reducing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is through education, enabling individuals to critically analyze the information they receive. Media litera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citizens recognize false inform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propose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resources that promote critical thinking and awareness of digital threats. This could include integrating media literacy into school curricula and running public awareness campaigns.



**김지우(청호중학교), 안지원(인천해원중학교),
유연서(진산중학교), 유지우(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Two years before Russia intervened in the U.S. in 2014, the Finland government launched a campaign to prevent fake news. As the trolling ramped up in 2015, Finland's president demanded every Finn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ight against false information. Finland recruited American experts to advise how to distinguish fake news and develop strategies to fight fake news, and its education was improved.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Finland ranked first out of 35 countries in a study that measured resilience to the post-truth phenomenon. However, some Finns protest that simply teaching media literacy is not enough and that many social media companies must work more to prevent the spread of fake news. Recently, Finland is winning the war on fake news because other countries are learning about Finland's ways and implementing policies.

Finland teaches people about media literacy. In Finland, teaching media literacy adopted a national goal in 2013; it campaigned for teaching how to differentiate fake news or information. For example, media literacy education is conducted in schools. In addition, students read news and discuss the purpose of the article, when it was written, and the purpose of writing an article. Finland gives people knowledge about such information, identifying sources, and learning how to handle it. I think it is a good way to keep people from being swayed by the media with media literacy education.

To prevent false information made with generative AI from threatening elections and democracy, Finland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its capabilities, such as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election campaigns. Literacy education methods are well-received. As society develops, media literacy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to enable children who are unable to distinguish false information from facts and has ranked first among 41 countries for five consecutive years in a 2022 survey on resilience to fake news published by OSI.

The rule of law, multilateralism, and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re the main goals of Finnish policy.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aw, notably in areas lik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it actively supports fortify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and ICC. Finland supports UN mediation attempts to settle disputes diplomatically and

supports the ratification of treaties like the Rome Statute. This strategy places a focus on bolstering legal frameworks and proactive diplomacy to guarantee that international law is followed everywhere.

Stronger enforcement mechanisms are required for the proposed international entity that supervises adherence to international law. Finland proposes establishing a multi-level system of responsibility that can enforce specific sanctions or diplomatic consequences on states that do not comply. In order to maintain fairness, it is important for this organization to have a rotating membership structure to prevent one group from gaining political control, and a system for automatically reporting violations, backed by continuous digital surveillance.

Finland suggests establishing a Global Mediation and Arbitration Network (GMAN) to address conflicts before they turn into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This system would provide unbiased mediation and mandatory arbitration, decreasing the reliance on extended legal procedures. With the assistance of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platform, GMAN aims to accelerate and make more affordable the resolution of disputes, particularly benefiting smaller states. It would also provide transparency by reporting to the UN General Assembly.



**권세은(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백효원(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정은유(청람중학교), 황예진(청람중학교)**

Honorable chairs and fellow delegates, this is the delegate of India.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social media platforms has profoundly impacted the global political landscape. In our interconnected world, the integrity of democratic processes faces considerable threats due to the proliferation of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The rapid spread of false information via digital platforms undermines public opinion, erodes trust in electoral systems, and weakens democratic institutions. Addressing these challenges requir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s nations increasingly recognize the need for cross-border effort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elections.

The government of India recognizes the serious threat that fake news poses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Particularly, in such a diverse nation, fake news often causes religious and ethnic tensions, sometimes leading to violence. To prevent such incidents, India

has enforced strong regulations aimed at restraining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specifically Section 69A, gives the government the authority to block or remove any content that might threaten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during election periods, where the impact of false information can be significant. In 2021, India created new rules called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These rules make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responsible for quickly taking action to stop the spread of fake news. Platforms like WhatsApp, Facebook, and Twitter are working with the government to limi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for example, by limiting message forwarding on WhatsApp and enhancing fact-checking mechanisms on Facebook and Twitter. The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ECI) has also strengthened its monitoring of social media during election periods. It requires platforms to promptly remove content related to fake news and take necessary actions to ensure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the electoral process. Furthermore, we are educating our citizens to identify fake news through fact-checking programs and awareness campaigns. The government-run MyGov platform offers fact-checking services to help people verify the truth of the information they encounter.

India values democratic processes and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that hinder democracy and peaceful processes. Recently,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the G20 continue to discuss this agenda, Indi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discussions on cybersecurity and information ethics as part of G20. India is also strengthening information technology laws and social media regulations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social issues.

On the global stage, India is collaborating with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to address the worldwide spread of misinformation. Given the global nature of social media, such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regulating fake news effectively. India stands committed to safeguarding both our democracy and the well-being of our citizens through these measure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has blocked YouTube channels, social media accounts, and websites that were found to spread fake news and information. Furthermore, at the G20 international forum, India has highlighted the dangers posed by disinformation, especially in the digital age, and has pushed for stronger regulatory frameworks to address these issues.

India's previous efforts to address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 elections have involved several collaborative initiatives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Past solutions such as 2021 Information Technology Rules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which mandated social media platforms to trace the origins of misinformation, and the Election Commission of India's Media Certification and Monitoring Committees (MCMC), which was set up to review political advertisements and flag fake news during election periods on mainstream media, have had some effects in increasing accountability, but their inefficiencies and flaws included reactive, not preventive actions, leading to slow content removal, disinformation actors adapting to the measures using encrypted platforms, and regulatory capture, where platforms were accused of being lenient with certain political parties. There also have been the launch of independent fact checking organizations such as Alt News, Boom Live India and digital literacy campaigns to educate voters on identifying fake news backed by international bodies like UNESCO, but their impacts only reached limited audiences, with poor penetration into the rural and less-educated population.

Reflecting on previous resolutions such as reactive measures, poor reach, and limited enforcement, India recognizes the need for solutions that are proactive, scalable, and tailored to the modern digital landscape. This delegate proposes 3 innovative solutions to further prevent misinformation, AI Driven Early Warning Systems, Global Treaty on Electoral Digital Hygiene, and Citizen Driven Fact Checking. First, the implementation of AI Driven Early Warning Systems using advanced AI algorithms which detects patterns of disinformation across platforms before they go viral by analyzing social media, encrypted messaging, and new trends in real-time, can cut the spread early by alerting authorities and media outlets. By identifying trends as they begin instead of reacting to already viral misinformation, the early warning system will allow governments to proactively address emerging threats. Next, this delegate proposes the GEDH, or Global Treaty on Electoral Digital Hygiene. This international treaty that binds countries and tech platforms to a standardized framework for curbing electoral misinformation, regulates platforms and mandates transparency to be vetted before publication. A global contract which encompasses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media outlets is important as digital platforms (which spreads the misinformation) are accessible to all people around the world. This treaty can ensure global cooperation and reduce regulatory loopholes, including provisions for penalties on tech platforms for non-compliance. This proposal reflects on the past mistake where too heavy-reliance on voluntary contribution

between governments and platforms led to weak practical measures, and so this delegate sees that this treaty which adds legal requirement for collaboration will act as mediators and enforcers, creating true accountability. Finally, the gamification of fact-checking is a citizen-driven misinformation detecting system where citizens are encouraged to spot, flag, and debunk misinformation. By giving incentives for verified correction through points, rewards, and special offers eg a chance to participate in real-life discussions on the matter with public officials, the crowdsource battle against misinformation could empower communities to self-regulate rather than solely rely on organizations, and could also counteract polarization through a positive, participatory civic engagement.



**고윤지(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김이안(인천신정중학교),
백채린(청람중학교), 최수아(청호중학교)**

We live in an era where information is abundant. Thanks to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we can access information anytime and anywhere. However, this also means that false information and fake news could become significant problems. Such information can make it difficult for people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it can have a major impact, especially during critical times like the elections. Now, to speak of the difference between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Misinformation is false information spread without malicious intent. Dis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is deliberately intended to deceive people. Fake news refers to news that is fabricated to mislead the public. In order to combat these global challenges,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working together on various fronts. Initiatives include creating frameworks for fact-checking, improving digital literacy among the public, and enhancing transparency in media and social networks. For example, platforms like the United Na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 are actively involved in promoting accur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efforts to debunk false claims.

In Brazil, misinformation and fake news have been particularly concerning. The country has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with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during elections. In the 2022 Brazilian presidential election, widespread misinformation, especially about the integrity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became a major issue amplified by social media platforms. This misinformation weakened public trust and contributed to growing polarization. In response, Brazil took several important step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the Superior Electoral Court (TSE) created a real-time fact-checking center and partnered with other 100 organizations, including major tech companies such as Meta, Google, and X, to limi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Brazil also collaborated with platforms such as WhatsApp, YouTube, and TikTok to enforce measures against disinformation. Intentionally, in addition to support from the OAS, the country worked with the United Nations and participated in regional effort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However, despite these actions, misinformation continued to circulate, undermining public confidence in the election process. This highlights the challenges of effectively combating disinformation and the need for strong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this global issue.

Various international bodies have initiated discussions to address this issue, focusing on transparency, media literacy, and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tech companies.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and regional organizations like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have all explored regulatory frameworks and technological solutions to comba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From Brazil's perspectiv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has been vital. Brazil has worked with the OAS and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to ensure electoral integrity. One significant initiative was the OAS mission that observed the 2018 and 2022 Brazilian elections, which played a crucial role in mitigating the effects of disinformation. Brazil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global cooperation, particularly in working with social media platforms, to curb the spread of disinformation during elections and ensure fair democratic processes.

Brazil's policies on combating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are primarily driven by the Electoral Justice Permanent Program on Countering Disinformation, established by the Superior Electoral Court (TSE). This program emphasizes three key strategies. To Inform, Empower, and Respond. First of all, to inform is that the policy focuses on disseminating reliable, official information to counteract false narratives. Brazil uses a variety of channels, including social media, to ensure accurate information reaches the public, particularly during elections. Second of all, to empower is that the policy also includes extensive efforts in media literacy, aimed at educating citizens to recognize and reject misinformation. This involves training sessions, educational campaigns, and collaborations

with media and academic institutions to build public awareness and resilience against disinformation. Lastly, to respond is that, on the enforcement side, Brazil's policy includes the monitoring of disinformation and taking corrective actions, such as removing harmful content and banning accounts engaged in spreading false information. The TSE collaborates with tech companies to ensure swift action against inauthentic behavior online. Brazil is also current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collaborations to exchange best practices and enhance global efforts against disinformation. These policies reflect a comprehensive, multi-faceted approach to safeguard the integrity of Brazil's democratic processes.

In reviewing past resolutions on combating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in elections, Brazil recognizes significant progress but also sees areas for improvement. One key area for amendment involve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social media platforms. While previous resolutions have emphasized collaboration with these platforms, they often lack concrete enforcement mechanisms to hold them accountable. Brazil proposes strengthening these resolutions by introducing clearer guidelines for social media companies, mandating them to take proactive measures in identifying and removing disinformation in real-time, particularly during sensitive electoral periods.

To enhance accountability, Brazil suggests revising resolutions to require social media platforms to publish regular transparency reports. These reports would detail their actions to combat disinformation, including how much false content was flagged, the speed at which it was removed, and how they handled repeat offenders. Additionally, there should be provisions for imposing stricter penalties, such as fines or limitations on operations within a country, for platforms that fail to meet these standards. This would create stronger incentives for tech companies to be more diligent in preventing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Furthermore, Brazil advocates revisiting previous resolutions to include more detailed protocols for collaboration between national governments, electoral bodies, and technology companies. This could involve setting up real-time monitoring teams during elections to allow for quicker response times in flagging and debunking false content. By amending past resolutions in this way, Brazil seeks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efforts are not just voluntary but backed by robust enforcemen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making global collaboration more effective in safeguarding democratic processes.

The delegation of Brazil would like to propose creating a global database of verified fact-

checking organizations, managed by A-WEB, that can work in real-time to counter misinformation during elections. This database would enable member states to rapidly deploy trusted sources to debunk false information in their local languages. Additionally, Brazil advocates for enhancing digital literacy programs, especially in vulnerable regions, to empower citizens with the tools to critically evaluate information. This comprehensive approach would ensure that international efforts are proactive, rather than reactive, in maintaining election integrity. Last but not the least, the delegation of Brazil strongly suggests the adoption of a framework for sharing best practices and technologies among member states to counter online disinformation.

Committee Name : A-WEB

Document No. : A-WEB/04/01

Agenda : Strengthening Democratic Processes: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fforts in Addressing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 Election

Main-Submitter : Germany

Co-Submitter : Brazil, India, Republic of Korea, Finland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processes and the need for transparent, free, and fair elections,

Acknowledging the challenges posed by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 disrupting electoral processes and undermining voter trust,

Emphasiz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addressing the transnational nature of these threats to democracy,

1. Encourages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between member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with the purpose of:

- a. Facilitating joint research on the impact of disinformation on elections and methods to mitigate it,
- b. Organizing regular multilateral meetings within the framework of A-WEB to discuss emerging threats and solutions,
- c. Promoting cross-border training programs for elections officials and media professionals on identifying and combating election-related disinformation,
- d. Developing initiatives that protect the integrity of election information and providing citizens with trustworthy resources during election periods,
- e. Establishing a global repository of best practices and case studies on election integrity, accessible to all A-WEB members, ensuring continuous knowledge-sharing

2. Requests the formation of a Global Election Integrity Task Force under A-WEB, comprising experts from member states, social media platforms, and election bodies, with the mandate to:

- a. Monitor online disinformation campaigns during election periods,
- b. Develop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ocial media platforms to report and combat disinformation,
- c. Provide real-time assistance and recommendations to national election bodies during crises,
- d. Implement an AI-Based Early Warning System using advanced AI algorithms that analyze and detects patterns of disinformation across platforms before mass-spread, cutting the virus early on by alerting authorities and media outlets,
 - i. AI-driven decoding of 'disinformation trends (encrypted messaging, social media)', gathered from data of previous misinformation happenings will allow governments to proactively address emerging threats,
- e. Create a global incident-reporting mechanism where citizens, media, and election observers can report cases of suspected disinformation, allowing the Task Force to act swiftly in real-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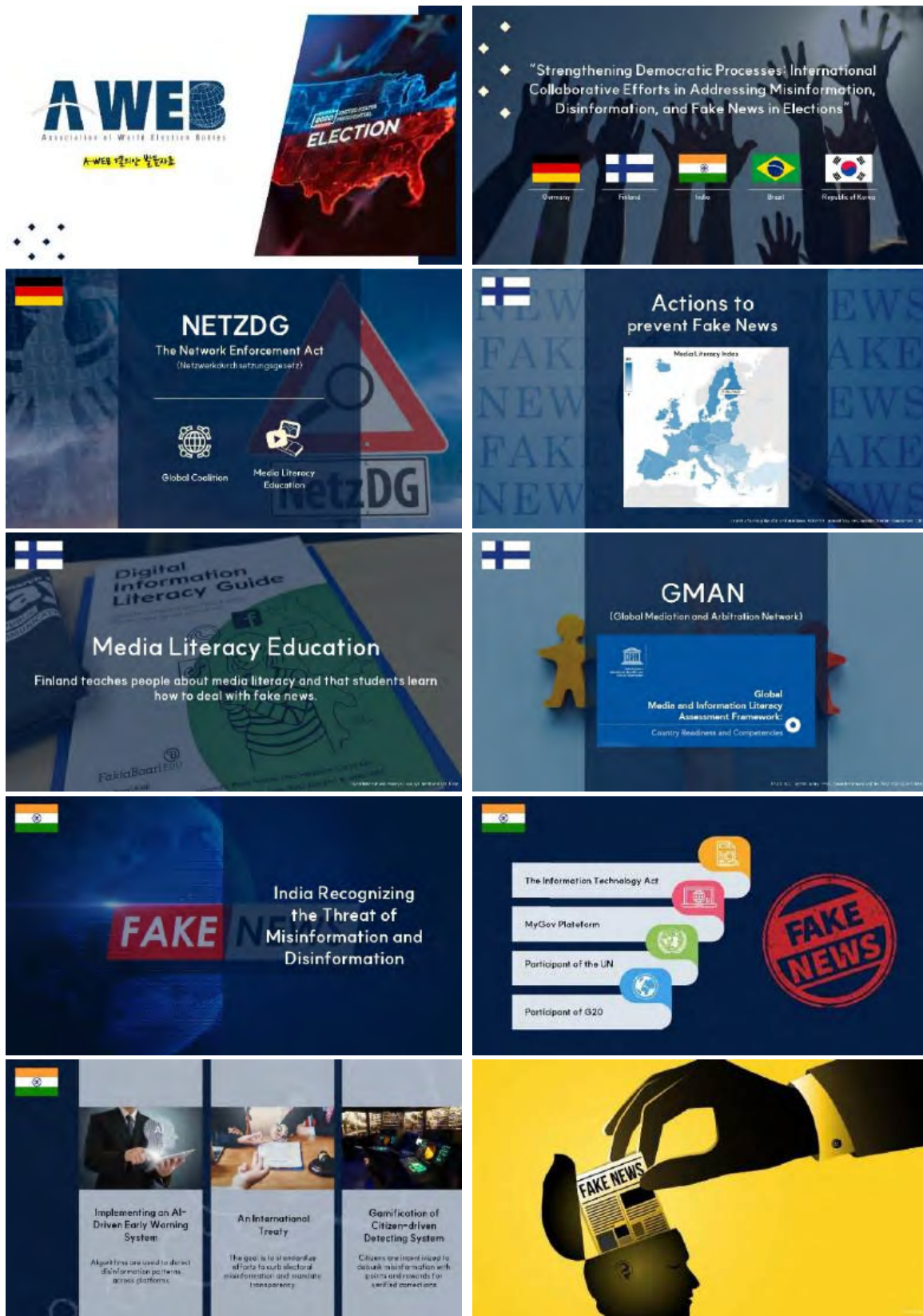
3.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especially in regards to media literacy, ensuring that citizens can acquire skills that aid in distinguishing misleading information leaked to the Internet, refraining from over dependence on the media, and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kills that enable citizens to judge and analyze information objectively and logic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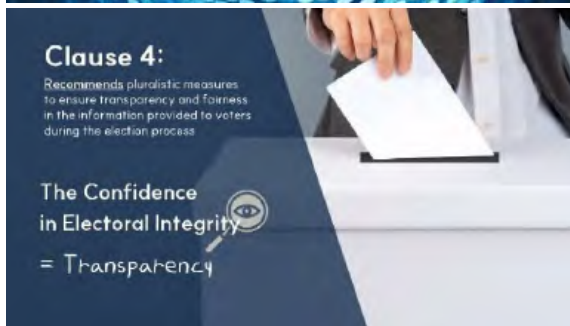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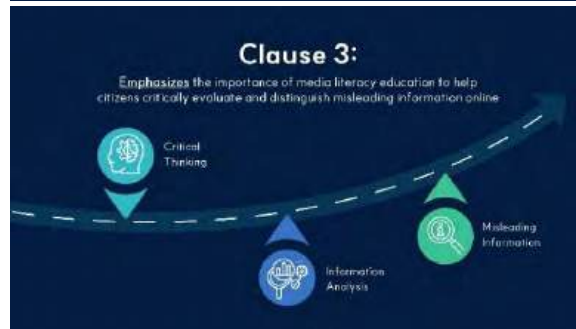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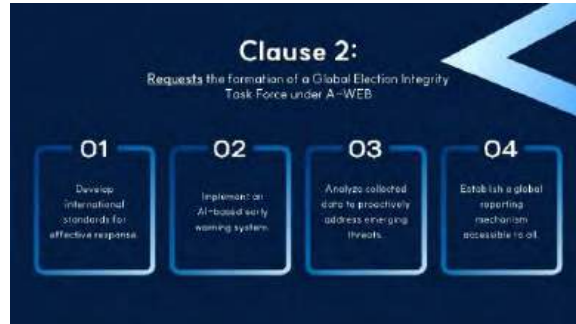
4. Recommends pluralistic measures to ensur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information provided to voters during the election process:

- a. Activate nationally recognized programs to provide election-related information to voters,
- b. Attach the official mark to election-related content from political parties or other platforms in order to distinguish reliable information from disinformation,
- c. Utiliz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ocial media platforms to report and combat disinformation to be developed and overseen by the Global Election Integrity Task Force under A-WEB;

5. Stresses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national sovereign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measures, ensuring that the fight against disinformation does not infringe upon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참가생 우수 에세이

연번	참가생 명단
1	강민주 진산중학교 3 학년
2	고윤지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2 학년
3	김민경 현송중학교 2 학년
4	김하은 옥련여자고등학교 1 학년
5	박강이소 덕신고등학교 2 학년
6	정은유 청람중학교 3 학년
7	차시연 검단고등학교 2 학년

강민주

진산중학교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은 않은 말임에도 간략한 설명을 곁들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별 목표와 17 개의 형형색색의 색깔로 칠해진 SDGs 도표는 아마 국제사회 일원들 모두가 한 번쯤은 접하지 않았을까 싶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퇴치, 기후변화, 양성평등 등의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17 개의 목표와 169 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 년에 제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결의이다. 2030 년까지 SDGs 의 17 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국제사회가 약속하며 2015 년 9 월 25 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은 매년 각 목표에 대한 글로벌 및 지역적 성과를 분석하며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여 SDGs 의 전 세계적인 진척 상황을 제공하고있다. 2023 년은 SDGs 가 결의된 지 8 년이 지난 중간시점으로 이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온 절반의 시간 동안의 데이터는 과연 지구촌이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을까? 2023 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SDGs REPORT 2023, UN)에 따르면 SDGs 개별 목표의 달성도는 고작 18%로 나머지 67%는 제한되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15%는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교육 기회가 확대된 등 성공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SDGs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국가 또는 지역별 불균형이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가 SDGs 달성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경향대로 진행되었으면 SDGs 달성도가 68%까지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3 년간 달성도가 0.7%밖에 상승하지 못한 66.7%에 머물렀다고 분석한다. 팬데믹 이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그 외에 기후변화, 자원 부족 문제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가 되고있다고 밝혔다.

국가별 SDGs 달성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166 개국 중 31 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2016 년부터 약 8 년간의 대한민국의 SDGs 달성도를 살펴보면 깨끗한 물과 위생(SDG 6)에서 수질 검사와 정수 시설을 강화해 수돗물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하수 처리 시설로 하수와 오수를 관리하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 대응(SDG 13)에서는 2050 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성평등(SDG 5),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 11),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SDG 9) 등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듯이 대한민국이 SDGs 에서 부족한 점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평등문제(SDG 10), 환경 문제(SDG 13,

14, 15)가 두드러지는 편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 활동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미세먼지의 의한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한 편이다. 서울의 경우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안정기준인 연간 $10\text{g}/\text{m}^3$ 을 2 배 이상 초과하는 $26\text{g}/\text{m}^3$ 수준으로 OECD 국가 내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대한민국 국민 1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다 하니 지구의 연평균온도가 1.5°C 이상 상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탄소배출감소정책과 같은 정책적 접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도 힘써야 될 차례이지 않을까 싶다.

UN의 연례 보고서를 읽어보며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학자들의 전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다만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도 지금은 별 일 아니라고 치부한 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원들이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 따름이다. 어느새 2024 년도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SDGs 달성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들이 적혀있기를 바란다.

고윤지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In a time of global challenge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vide a vision for a world where everyone has the chance to thrive, no matter where they live. They were created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Rio de Janeiro in 2012, with the aim of forming a set of universal objectives that address the urgent environmental,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of our time. Alongside the Open Working Group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n inclusive and transparent intergovernmental process to draft propos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UN system facilitated 88 national consultations on the future people envision, 11 thematic consultations on diverse issue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6 dialogues on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even conducted door-to-door surveys. The UN also initiated the online "My World" survey, asking global citizens to prioritize the areas they felt should be addressed in these goals. This was a continu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which in 2000 launched a global effort to tackle the indignity of poverty by establishing measurable, universally agreed-upon objectives to combat extreme poverty and hunger, prevent deadly diseases, and expand access to primary education, among other key development priorities. The 17 SDGs stand out because they address issues that impact everyone, reaffirming our international commitment to end poverty, en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and most importantly, involve everyone in the mission to create a more sustainable, safer and more prosperous world for all of humanity.

Since the adoption of the SDG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noteworthy progress in several areas. Globally,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reduction in extreme poverty, with millions of people lifted above the poverty line, thanks to targeted economic interventions and social safety nets. In the area of health, considerable advancements have been made, particularly in reducing child mortality rates, improving maternal health, and combating diseases like HIV/AIDS, malaria, and tuberculosis. Efforts in education have also shown to be successful,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receiving primary education, especially in developing regions. Additionally, there has been a global push towards more sustainable practices, with countries adopting policies that promote renewable energy, reduce carbon emissions, and protect biodiversity.

South Korea, as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has been a proactive contributor to the achievement of the SDGs. The country has integrated the SDGs into its national policies and has been particularly successful in areas such as education,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 South Korea's educational system is one of the most advanced in the world, and the country has made marked strides in ensuring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for all. South Korea has been positioning itself as a leader in technological innovation, which has been instrumental in advancing the global agenda on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Furthermore, South Korea has been activ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in Asia and Africa, to help them achieve the SDGs. The KOICA, short for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as played a vital role in these aforementioned efforts, focusing on areas such as poverty reduction, education, and healthcare. South Korea has also made commitments to address climate change, pledging to reduce its carbon emissions and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his commitment is reflected in the country's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and green technologies, which are crucial for achieving the goals related to affordable and clean energy, climate action, and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However, despite these successes, there remain significant challenges. Globally, progress on some goals has been slow, specifically those related to inequality, climate action and sustainable cities. The recent COVID-19 pandemic has further exacerbated these challenges, reversing years of progress in some areas and highlighting the deep inequalities that persist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In South Korea, while the country has made impressive progress in many areas, there are still issues that require attention. For instance, the country faces challenges related to social inequality, especially with regards to income disparity and gender inequality. In addition, South Korea's economy remains heavily reliant on fossil fuels, and despite its commitments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has been slower than expected.

In conclusion, while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i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oth globally and in South Korea, there is still much work to be don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remaining challenges. South Korea, with its active role in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a crucial role to play in this global effort. By addressing its own domestic challenges and continuing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abroad, South Korea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achievement of the SDGs, ensuring a better and more sustainable future for all.

김민경

현송중학교

오준 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지구에 살고 있으며, 인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계시민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구부터 살리기도 바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겉모습 치장에만 열중이다. 물론 그레타 툰베리처럼 적극적인 행동이 필수는 아니지만, 인류가 한마음이 되어 올바른 의식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주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구와 국제 사회에 대한 배려가 묻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준 대사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기후변화라고 하셨는데 나도 이에 동의한다. 정확히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더욱 관심이 있다. SDGs 목표에는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는 14 번째 목표가 존재한다. 사실 육지보다 더 큰 바다인 만큼 더 많은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바다는 무한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인천은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인만큼 바다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이다. 철새들도 갯벌과 습지에 많이 쉬어가고, 물범과 흰발농게 같은 갯대종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인천 바다이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보통 바다의 목적은 개발, 관광, 그리고 집값 등의 이익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진다. 사람들이 송도를 바다를 메꾸어 만든 것처럼, 행동에 악의가 없더라도 이는 해양 생물들의 터전을 빼앗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는 어느새 해양 생물의 일상이 되고, 우리는 곧 오염된 물고기를 먹게 되는 미래를 마주할 것이다.

바다는 운송 경로이자 어업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날씨와 기후 그리고 공기까지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14 번째 목표는 해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양 오염을 줄일 것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해양을 바꾸고, 보전하기 위해 작은 청소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먼저,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지식을 배우면 조금이라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노출과 배움 없이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환경 의식을 깨우칠 순 없다. 학생들이 직접 SDGs 등의 목표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해보며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제 지구 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니 말이다. 그다음은 개인의 마음 먹기 나름이다. 우리는 사회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지역부터 찬찬히 들여다보고, 직접 발로 뛰며 자신의 실천에 의한 변화의 기쁨을 맛봐야 한다. 모니터 속 세상에서

벗어나 바다 내음을 맡고, 그 소중함을 느껴야 한다. 무지와 무관심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을 부수고 자신이 힘들거나 귀찮더라도, 더 큰 행복을 위하여 도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있는 이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다.

김하은

옥련여자고등학교

2015 년 당시 UN 은 향후 15 년 동안 국제사회 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2012 년 리우 회의에서 글로벌 체제에 대해서 각국 정상들과 합의하고, 17 개의 새로운 목표 지속 가능발전 목표를 도출했다. 이전에 존재하던 말레니움 개발 목표의 한계점, 즉 목표가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며 실천되고 있다.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 성장 기본법등 효과적인 법률들을 이행하며 SDGs 를 실천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사회 인프라에 관련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얼마 전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을 읽으며 UN 이 발표한 가정폭력 대응 메뉴얼에서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당한 상황을 대처할때 상황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자를 교육 등으로 교화한 후, 피해 아동을 본래 가정에 돌려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과연 그 방법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반에는 가정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동일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이성적인 제 3 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어머니와 대화를 하며 듣게 된 한 사건으로 관점이 전환되었다.

어머니께서 부천 북부역 근처에서 첫 식당을 운영하실 때 가게 뒷편 빌라에 사시던 분께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환기시설로 인한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시거나 행패를 부리시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 집에서 여자아이 둘이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마트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만 사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신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담그기 까다로운 김치를 가져다 주시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좋아했지만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아이들 아버지의 태도였고 어머니에게 감사해하셨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아이들의 아버지가 감사했던 이유는 새벽에 일을 나가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야기의 앞 부분을 들으며 아동학대 중 밤임이라는 생각에 신고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들은 후에는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이 그 가정을 그리고 아이들을 사회적 복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신고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마음과 함께 아이들에게는 보호 시설에 가서 형제자매와 떨어지거나 부모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닌 그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가족과 행복을 꿈꾸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아무리 아이들이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기존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꿈이기에 우리가 나서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그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바우처 사업의 확장이 있는데 바우처 사업이란 늘봄이라고 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 이돌봄의 일환으로 아침 돌봄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사회적 협동 조합은 "평등이란 아침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매일 아침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는 아이들과 사회적 소외 계층의 아이들의 아침을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아침에 깨워줄 부모님이 없어 기본적인 초등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협동 조합에 대한 지원과 바우처 사업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으로 아침 뿐 아니라 하루를 사회의 보호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박강이소

덕신고등학교

SDGs 의 7 번째 목표인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한다. 최근 치뤄진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RE100 에 대해 질문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이 무엇이나'고 되물어 화제가 되었다. RE100 은 기업의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시작된 운동이다. 이는 SDGs 의 7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중 하나이다. RE100 은 국제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기업인 애플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애플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부품을 제작하는 하청업체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애플의 요구에 반한다면 애플과의 재계약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그 업체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겨준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과 LG 의 계열사들도 애플의 부품조달을 맡고 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도입은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윤석열 전 후보는 RE100 을 몰라 이재명 전 후보에게 되물어 봤으며 되물어본 윤석열 전 후보는 현 대통령이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RE100 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RE100 은 고려해야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먼 미래 우리나라 경제는 점차 하락하게 될 것이다. 애플과 같은 해외 대기업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 유럽의 경우 국가와 EU 연합등 RE100 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무시하더라도 유럽의 시민들 또한 재생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을 소비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시간이 지나갈 수록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늘을 것이며 재생에너지를 고려하는 국가들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재생에너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국가 경제가 하락하는 것에 대표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아젠다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되더라도 대물림될 것이고 세계화 되어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될 것이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며 이전부터 충분히 경고 해왔던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행동해야 하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피해보는 것은 청소년일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 한다면 의문점이 들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우리는 선거권도 없고 돈도 능력도 없는 걸요." 맞는 이야기다.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청소년보다 기성세대의 요구에 맞춘 정책을 내놓으며 청소년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도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서명운동이다. 서명운동은 나이불문하고 누구나 똑같은 한사람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국내 정치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서명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위를 통해 행동할 수도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론조사에 참여가 가능할 때는 참여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가 인터넷으로 발전하며 누구나 쉽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명운동이나 여론조사가 올라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존재하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인터넷 상위검색어나 알고리즘에 이를 나타내도록 유도하여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공유하고 이를 실현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내가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왔던 세대는 기성세대가 아닌 청소년과 청년이다. 우리나라를 바꿔왔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현 세대의 역사의 주인공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정은유
청람중학교

The roots of modern development methods can be traced back to pivotal moments in history, such as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Ever since the French Revolution, humanity began questioning the authenticity of equality, a pursuit that eventually gave rise to the Age of Enlightenment. The French Revolution highlighted the ideals of liberty and sparked a global conversation about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People challenged the exclusive privileges historically enjoyed by the elite and sought to establish an equitable and just society. Meanwhile, the Industrial Revolution reformed economies, bringing unprecedented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reating severe polariza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These historical milestones became the background for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vision, where the tension between progress and justice continues to shape global efforts.

Fast forward to the 21st century, the world is still facing the same problems but more complicated than ever. Despite significant innovations in various fields, poverty,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remain pervasive. In response, the United Nations launch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5, a global framework to cope with these interconnected issues by 2030. But why were the SDGs necessary, and what makes them so essential for the futu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merged in response to both the successes and shortcomings of earlier global initiatives, particularly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established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15. The MDGs were developed following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Summit, where the "UN Millennium Declaration" was adopted, and aimed to address 8 key global issues by 2015. While the MDGs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 in areas such as reducing extreme poverty and improving access to education, they also had clear limitations. The MDGs were criticized for being too narrow in scope, as they primarily focused on developing countries and failed to address the systemic factors underlying global challenges. Recognizing these shortcomings, world leaders understood that a more comprehensive and inclusive approach was necessary, one that could account for the complexities of global development and apply universally to all countries, not just those in the Global South. The SDGs were designed to fill this gap,

with 17 interconnected goals dealing with a wide range of issues, from climate action to peacebuilding. This framework acknowledges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a holistic approach, where progress in one area reinforces progress in others, and where the collective efforts of every country are crucial.

One of the primary reasons the SDGs are vital is their recognition of the correlation of global challenges. While some aspects of the SDGs align with the goals of the MDGs, the SDGs go further by being more subdivided and specialized. For example, climate change exacerbate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often affecting the poorest and most vulnerable populations. Similarly, unchecked economic growth can lead to environmental degradation, which in turn threatens long-term economic stability. The SDGs seek to handle these issues by promoting a balanced approach to development that consider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imultaneously.

Furthermore, the SD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lobal cooperation. Unlike the MDGs, which largely focused on ai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nations, the SDGs call for a collaborative effort involving all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civil society. This reflects the understanding that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pandemics, and inequality require coordinated global responses. As globalization becomes prevalent, even shaping our daily lives, no single country can solve these problems solely, and the SDGs lead countries to work together towards shared goals. This inclusive process increases the legitimacy of the SDGs and makes it more likely that the goals will be adopted and implemented at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In conclusi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mark a transformative moment in our quest for a better world, drawing on the lessons of history and the pressing needs of our time. These goals reflect our collective aspiration for a world where every individual can thrive, where no one is left behind, and where the natural world is cherished. By embracing the SDGs, we honor the spirit of cooperation and empathy, recognizing that our actions today shape the legacy we leave for future generations. Together, we have the power to turn this vision into reality and to build a world where every person can live with dignity and hope.

차시연

검단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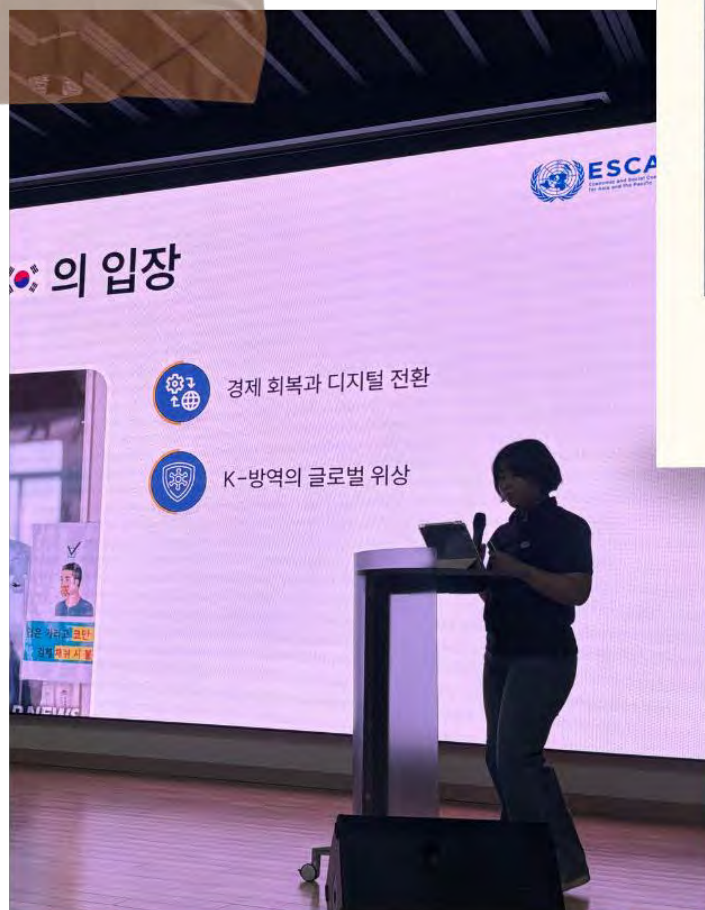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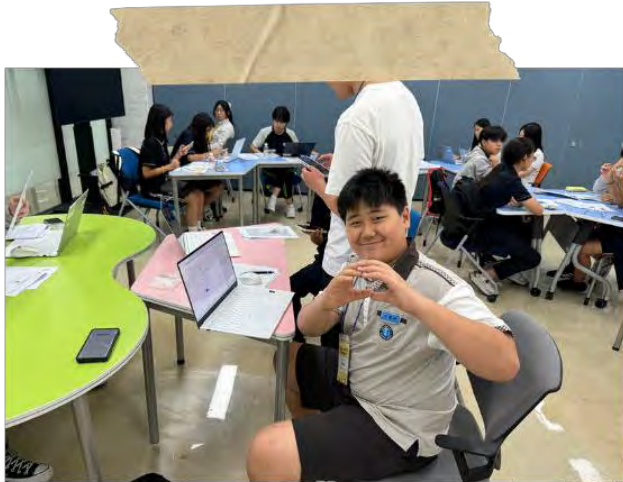
21 세기에 들면서 인류는 불평등, 빈곤,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글로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 년, UN 과 모든 국가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SDGs 는 인류가 2016 년부터 2030 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환경의 3 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고 '인간 중심'의 가치 지향을 최우선으로 하는 17 개의 목표와 169 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SDGs 는 2000 년대 초반에 채택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의 후속 목표로 탄생하였습니다. MDGs 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부분에서 1990 년에 19 억 명의 극빈층을 2015 년까지 총 8 억 3600 만 명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으며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부분에서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의 수가 2000 년 1 억 명에서 2015 년 5700 만 명으로 줄어드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평등 촉진과 유아 사망률 감소, 환경 지속 가능성의 보장, 발전을 위한 세계적 동반 관계 구축 등의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MDGs 는 전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평화, 안보,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정하지 않았으며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지속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사회적,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극심하고 기초적인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뿐,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인권을 누리고 있는 인구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UN 은 MDGs 의 부족함을 채울 새로운 목표인 SDGs 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SDGs 는 MDGs 의 부족함을 완벽히 채우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 SDGs 의 이행 현황을 본다면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 감소, 교육의 질 향상, 깨끗한 물과 위생 부문에선 개선된 결과를 띄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SDGs 의 목표의 16%만이 2030 까지 전 세계적으로 달성될 예정이며, 나머지 84%는 제한적인 진전을 띄거나 오히려 퇴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2015 년 이후 국가가 가장 높은 비율의 퇴보를 보인 5 가지의 SDG 의 목표는 비만율(SDG2), 언론의 자유(SDG16), IUCN 적색 목록(SDG15), 지속 가능한 질소 관리(SDG2), 그리고 코로나 19 와 국가마다 다른 요인으로 인한 기대수명(SDG3)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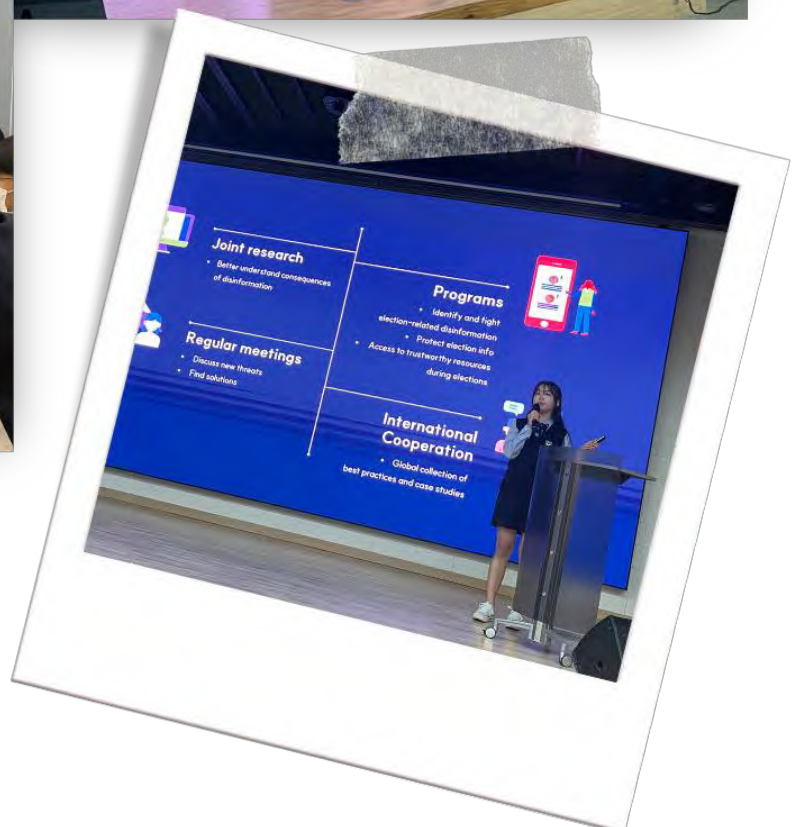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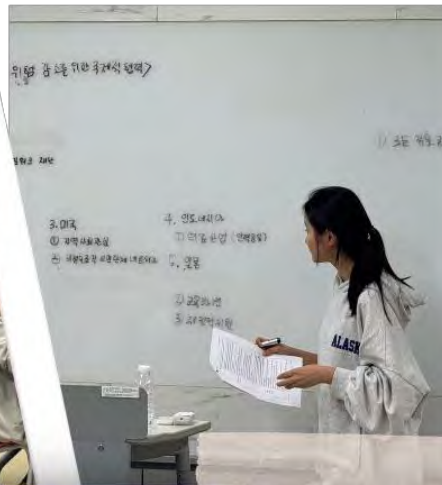
또한 저는 SDG 진행 속도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SDG 달성에서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리고있으며 BRICS 국가들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의 SDG 진행 속도는 점점 더 퇴화되고 있으며 SDG 이행 속도가 빠른 국가들과의 성과 차이는 2015 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 말고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해수면 상승, 생물의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도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앞 글을 통해 국제사회의 SDGs 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SDG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DG1(빈곤 퇴치)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초 식수 및 위생시설 보급률 또한 99%~100%를 이루고 있습니다. SDG4(양질의 교육 보장) 부문에서 초등학교,중학교 교육 완수율이 99.9%~100%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의 비율이 10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SDG13(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 정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한계, 불평등 해소에 관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SDG13(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많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이후 산업계의 생산활동 회복으로 인해 2021 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교통 부문에서 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SDG5(성평등) 부문에서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증가하였으나 2010 년~2022 까지의 성폭력 피해율은 여성 성폭력 비율이 남성의 성폭력 비율보다 약 1.1%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SDGs 현황을 보며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산업 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며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계층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 국제사회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활동 갤러리











인천세계로배움학교

2024 국제기구 인재양성 캠프

발행일	2024년 10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 김수로
발행처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 번길 118



인천세계로배움학교 2024 국제기구 인재양성 캠프



IEGI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118

Tel. 032-745-0223 Fax. 032-745-0233 <https://iegi.go.kr>